

한국사회의 인구변천과 근대성에 대한 성찰 1)

박경숙 (서울대 사회학과, pks0505@snu.ac.kr)



제작: 고려대학교 대학원생의 날 너다들이 학술강좌 (2019년 11.15)

1) 이 글은 2019년 대한민국10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2019.11.7.-9), 고려대학교 대학원생의 날 학술 강좌(2019.11.15.), 이민정책 연구원 10주년 기념행사에서 공개강의하였고, Asian journal of Sociology (2019, 48/4)에 A few thoughts on low birthrate, aging societies: reflections on demographic transition and modernity in Korea 로 출간되었다.

1. 저출산 고령화, 무엇이 문제인가

저출산 고령화는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커다란 사회 변동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함축한 사회변화는 생명과 삶의 기초가 크게 변동됨을 의미한다. 매해 태어나는 아이가 크게 줄어든다는 것은 새롭게 사회성원이 되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이 태어나는 사회와 소수의 사람이 오래 사는 사회의 다양성과 활력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출생이 줄어든다는 것은 또한 미래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출산율이 감소한 주된 원인인 만혼화는 친밀성, 생계, 돌봄을 가족이나 공동체가 아니라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청년, 중장년, 노년에 거쳐 혼자 사는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친밀성과 돌봄이 더 이상 안정된 결혼이나 가족생활을 통해 약속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빈곤 노인의 외로움과 고독사 또한 가족 중심의 부양, 돌봄 시스템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는 미시, 거시 수준에서 삶과 생명의 기본 조건인 생존, 재생산, 부양, 친밀성의 조건이 커다랗게 변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지금까지 표준적으로 인식된 삶의 조건에서 이탈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고통과 갈등이 커지는 것은 당연히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서 인식된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무엇이 위기이고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시선들이 엇갈린다. 그리고 엇갈린 시선은 매우 상충된 사회 과제를 제안한다. 황금기 근대 관념과 제도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 사이에서 개인, 사회집단, 정부 모두 혼돈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대책을 실천하기 위해 상당한 재원을 투자하였지만 출산율은 더 낮아지고 있고 사회는 분열되고 있다.

이 글은 저출산 고령화로 압축되는 한국 사회의 변동의 의미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와 과제에 대한 작은 관념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 변동적 성격과 과제를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주목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인구변천과 근대성 사이의 강한 연관성을 개념화하는 것이다. 여러 사회에서 고출생고사망에서 저출생저사망으로 이행하는 인구변천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많은 인구가 무계획적으로 태어나 가난하게 고생만하다가 일찍 죽는 것보다,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오래 살고 전쟁과 질병으로 유출되지 않는 것은 이상적인 인구 균형 상태로 여겨졌다(Livi-Bacci, 2009). 인구변천은 경제발전과 개인의 자율성의 증진이자 성취이며, 이를 아직 획득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꼭 이루어야 하는 사회 발전의 과제로서 인식되었다.

한편 이런 긍정적인 사회변동으로서 인구변천을 파악하는 관점이 의문시된 것은 근대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함께 이루어졌다.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2차 인구변천 논의는 인구변천에 작용했던 가족, 젠더의 근대적 구성과 해체 현상에 주목한다(Van de kaa; Lesthaeghe, R. 2010; Van de Kaa, 2004, 1996). 근대사회의 미시적 기초였던 젠더관계와 가족을 개인의 자율과 평등의 관점에서 의문하였다. 또한 불사의 삶을 살 수 있고,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욕망이 다다를 수 있는 미래 사회의 운명을 우려하였다(Harari, 2015).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해온 인류의 역사가 역설적이게 우리가 속한 인간 집단의 종말을 향한다는 불안도 가세한다. 이렇게 근대의 사회, 인간 삶에 대한 성찰과 함께 생산, 재생산, 돌봄의 사회 조건이 다양하게 변화된 것이 이차인구변천의 특성이다. 보다 개인을 중심으로 재생산, 생존, 돌봄, 친밀성의 조건이 사회 마다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한국사회는 인구변천과 사회발전을 강하게 열망한 대표적인 사회다. 한국사회는 발전주의와 근대가족의 욕망으로 질주하였다. 발전주의와 근대가족의 관념은 한국사회와 한국인의 중심된 조직 원리이자 삶의 욕망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인구변천은 발전과 근대가족 이념을 소명으로 실천한 근대화 과정과 그 모순의 심화 과정에서 압축적으로 전개되었다. 발전과 근대가족을 실현하려는 욕망과 실천에 의해 인구와 생명이 계획적으로 관리되었고 발전주의와 근대가족 관념이 더욱 공고화되면서 근대적 삶의 양식에서 이탈하는 인구변천이 전개되었다. 보다 나은 삶의 균형 상태로서 믿었던 인구변천은 급기야 재생산이 중단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요컨대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 변동적 의미는 발전주의와 근대 가족 관념으로 조직된 사회구조와 삶의 양식으로부터 이탈하는 인간이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발전과 근대가족 체제의 내적 모순은 생명이 지나치게 발전, 힘, 생산, 성공을 중심으로 선택되고 불평등해지는 것이었다. 또한 젠더 불평등한 성별화와 도구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가족중심의 삶에서 친밀성, 부양, 돌봄의 긴장이 심화된 것이다. 만혼화, 출산율 저하, 청장년층과 노년층의 싱글화, 노년의 소외 현상은 이처럼 발전과 가족을 최고의 자리에 올린 근대 사회의 표준적 삶의 모델로부터 이탈된 삶의 예다. 근대의 열망과 그에 내재된 모순의 심화가 압축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좌절, 이탈, 저항이 분출하고 젠더, 세대, 계층 등 사회집단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인구변천의 사회변동 성격으로 주목하는 두 번째 특징은 이런 근대적 표준 삶의 욕망과 그로부터의 이탈이 평행하게 질주하는 가운데 욕망, 가치관, 제도적 규정과 현실적 조건 사이의 괴리를 투사한 정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다.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문제라고 인식하면서도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진단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자기 이해 중심적이고 계층화되었다. 어렵פות이 세 부류의 이해 집단이 구분된다. 하나의 집단은 근대 체제에 가장 중심에 속한 집단으로서 발전과 성공을 위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완벽한 인간 발달을 실현하기 위한 질주를 멈추려 하지 않고, 성공한 자들을 선택하는 사회시스템이 공정하다고 믿는다. 이 집단의 믿음과 인식은 사회 제도의 지배적인 원칙이 되어 사람들의 삶을 소수의 정상과 대다수의 위기로 차별화한다.

두 번째 부류는 발전과 가족의 친밀성과 부양을 욕망하였지만 성공, 친밀성, 돌봄, 부양의 기회를 획득하지 못한 사람들 중 다수로서 좌절과 박탈감을 갖고 국가주의, 발전주의, 가부장 사회를 황금기 근대로 신화화하고 현재로 소환하려는 입장이 강하다. 과거를 소환하는 목소리를 부추겨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서 경제를 살리고 가족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보수적 정책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수적 인구정책은 젊은 여성들에게 상당한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세 번째 부류는 발전과 근대가족 논리에서 좌절하고 억압과 상처를 받은 나머지 다양한 집단들이다. 이들 중에는 자아의 고통이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사회구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권리 보장을 위해 저항하고 투쟁의 대열에 합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박탈과 좌절 경험이 더 고착되면 절망하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삶의 의미를 확신하지 못한다. 능력과 힘을 강조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차별을 받으면서 자아가 심각하게 위축된다. 강한 주체만이 인정받는 사회 시스템에 동화하지 못하고 대안의 삶의 희망도 갖지 못하면서 방황한다. 박탈감과 분노, 외로움, 나약함, 두려움이 자아를 휩쓸고 부순다. 고통 속에서 죽어간다. 적극적인 사회개혁을 약속했던 진보 정치 진영은 발전과 근대가족의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

고 배제되고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공감하지 못하였다. 여전히 정상과 위기로 차별화된 사회 범주 속에서 장애인, 외국인, 탈북주민, 재외동포, 다문화가족, 미혼모, 성소수자, 많은 청년, 많은 여성, 많은 노인들은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역동성과 혁신의 잠재성은, 이 많은 위기의 인구들이 좌절과 부서짐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 아직 근대의 관념, 욕망과 제도가 공고하고, 여전히 강자가 더 번성하고 행복하고 약자는 절망 속에 울부짖고 있다. 그러나 부서짐이 종말이 아닐 수 있다. 부서짐으로써 희망이 스며들 수 있다. 부서짐이 두려워 집착을 움켜지면 더 고통 속에 빠져든다. 한 없이 무력해지고 약해짐에도 희망을 잃지 않음으로써 저항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인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위기가 성공과 발전으로 삶을 차별하는 정상의 논리에 기인함을 가리지 말고 직시해야 한다. 새로운 시작을 낳은 틀에 가두지 않아야 한다. 보다 자기다운 삶을 지원하고 다양한 삶의 조건에서도 재생산, 생존, 돌봄, 친밀성의 조건이 보호되는 사회로 가는 길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

2. 인구, 생명/삶의 변천과 근대성

1) 발전과 근대가족의 욕망 속에서 가속화된 인구변천

한국사회에서 인구가 근대화를 위해 가장 중차대한 사회 문제로서 호명된 시기는 1960년대 초반이었다. 당시 사회의 커다란 개혁의 방향은 근대화와 발전이었다(Repetto, R., 김선웅, 권태환, 김대영, J.E. Sloboda, P.J. Donaldson, 1983). 경제발전과 근대화에 대해 강한 열망을 가진 세대들은 한국사회의 압축적인 경제발전은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영향이 컸다고 믿는다. 이런 믿음과는 달리 한국사회의 경제 발전을 견인한 주체들은 민간 경영인, 지식인, 그리고 평범한 국민들의 영향이 매우 실질적이었다. 지식인들은 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발전으로 모으기 위해 서구사회, 특히 미국과 일본의 성공을 배우고 전파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양재모, 2001). 근대화는 욕망하는 강한 주체를 만드는 기획이었다. 한국인은 식민 지배를 통해 가난과 차별 속에서 문명을 욕망하고 운명에 굴하지 않는 저항정신을 키웠고, 압축적 경제개발과 근대화를 향해 질주하였다. 정부, 지식인, 보통의 민간인들이 뜻을 같이 한 근대화의 거대한 목표에서 인구는 매우 중요한 혁신의 과제가 되었다. 가족계획은 1960대 생명의료, 건강, 인구정책, 대외정책이 연결되어 가장 중심이 되는 사회개혁 사업이 되었다(Mari Calderone, 1970; 버지니아 코이니(안정숙 옮김, 1990)). 1950년대와 1960년대를 통해서 가족계획은 범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바람직하고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운동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다. 한국사회는 국제사회로부터 가족계획 실천과 관련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으면서 경제와 사회발전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였다. 그런데 가족계획과 인구통제가 발전에 필수불가결하다는 믿음은 점차 인구통제 지표 자체만으로도 발전과 동일시하는 강박증으로 변하였다. 발전목표가 생산크기로 계량화되고 명확한 수치로 제시되고 목표 수치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 전략들이 만들어진 것처럼, 가족계획의 목표 수치가 국가에 의해 지시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기층 조직 단위를 통해 민첩하게 전달, 실행되었다(홍문식, 1998; 공세권, 김승권, 조애저, 1992; 배은경, 2009; 조은주, 2018).

출산율과 사망률 감소는 사회의 경제, 보건, 의료, 정치, 가치 변화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교육확대, 산업화, 도시화, 부부중심의 가족의 탄생, 친밀성의 변화 등 사회 변화 요인들이 조합되는 양상은 사회마다의 독특한 행위성에 기반 한다. 근대화 과정은 서구 경험의 일방적인 전파나 보편적인 수렴 과정이 아니었다. 한편으로 근대에 대한 욕망이 컸지만, 오랜 습속의 행위체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압축적 근대화를 실천한 주체들의 심성은 혼용과 절충성을 특징으로 한다. 매우 근대지향적이면서, 매우 가부장적이면서, 발전주의 심성을 가졌다²⁾.

전통적인 가족관념과 젠더질서는 봉건제적 신분, 빈곤, 민족, 계급 모순 등 중층화된 사회 문제와 결합되어 있었지만 개혁의 리스트에서 배제된 채 미풍양속으로 머물러 있었다(양현아, 2005; 김혜경, 2013). 가급적 빨리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생활양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가족, 사회 모두가 총력을 기울였지만 근대의 신화 속에서 갈등적으로 잔존한 것이 가부장제적 젠더 관계와 가족 제도다(박경숙, 2017). 가족의 제도적 정의는 1950년대부터 2000년대 호주제가 폐지되기까지 전통적인 부계 친족과 혈족 공동체의 이념에 호주의 독점적인 권리가 가세되어 가부장적 성격이 강하였다(양현아, 1995; 이동진, 2002). 일반 사람들의 관념체계로서 가족 중심적 인식이 지배한 것은 사회적 안전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발현된 생존전략으로 강조하기도 하지만(조한혜정, 1985; 장경섭, 1992) 한국인의 가족중심적 관념은 조선시대를 통해서도 여느 공, 사의 가치체계를 우선하였다.

유교적 이념과 부계적 친족 가족 이념에 가족계획의 원리가 결합되었던 것은 세속적 성공을 목표로 한 부계가족과 부부가족 이념의 갈등적인 절충 전략이었다. 서구의 근대가족 이념은 부모세대로부터 자녀부부세대의 독립된 가족생활을 강조한다. 가족계획의 국제적 확산과 함께 소가족의 이념은 문명화된 가족관계로 인식되었기에 많은 국내 근대화론자들은 한국의 부계적 가족 관념이 가족계획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그러나 우려와는 반대로 가족계획 수용에 대한 관습의 저항은 별로 크지 않았다. 한국 뿐 만 아니라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인도, 중국에서도 남아선호사상은 출산통제에 큰 장애요소가 되지 않았다(Guilmoto, 2009)³⁾. 오히려 뿌리 깊은 남아선호 사상은 출산을 계획적으로 통제하는데 근대적 피임기술을 활용할 수 있었다. 다자녀관은 농촌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공업화 사회에서 실용적이지 않았다. 반면 일반적 여론은 근대적 사회에서도 가부장적인 가문,

2) 1962년에 경기도 고양군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피임에 대한 찬성율이 77%였다. 반면 피임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56%이고 피임방법을 사용한 경험은 불과 8%에 제한되었다. 같은 조사에서 이상 자녀 수는 4.4명으로 남아 2.6명, 여아 1.8명으로 남아를 선호하는 태도가 강하였다. 아들을 선호하는 이유로 노후부양을 남성응답자의 31.9%, 여성응답자의 62.2%가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가문계승을 남성응답자의 34%, 여성응답자의 28.2%가 지적하였다. 딸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서, 생활비와 교육비를 응답한 비율이 남녀 비슷하게 74-5%가 되었다(대한가족계획협회, 1991). 가족계획 사업이 실시된 이후 1968년 경기도 양주군 진건면 조사(서울여대 윤종주 교수 책임)에 따르면 가족계획을 찬성하는 비율이 86% 매우 높았고, 가족계획을 알고 있는 비율 94%도 높았다. 또한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이나 찬성하는 태도가 교육수준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이다). 이것을 저자는 당시 가족계획사업이 계몽 단계를 벗어나 있음을 가리킨다고 해석한다. 당시에도 두 명의 아들 존재를 선호하였다. 남아선호사상이 강해서, 아들 출산 여부가 가족계획 실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아들을 낳았을 때 가족계획욕구와 실천율이 높고, 아들이 없을 때 가족계획 실천율이 낮은 것으로, 남아선호사상이 출산감소에 제약이 됨을 강조하였다. 이런 가족계획 초기 조사 연구들에 기초하여 가족계획사업은 출산율을 줄이기 위해서 한편으로 남녀 평등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문화, 제도적 요건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산아제한 기술 개발과 보급을 장려하였다(조남훈, 1988).

3) 질모토는 가족계획을 국가 정책으로 진행한 중국, 인도, 한국에서 심각한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성비 불균형 현상에 주목하였는데 출산통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출산통제기술의 적극적 활용, 남아선호 사상이 결합된 결과로 설명한다.

상속, 가족제도의 관념으로서 남아선호사상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많은 가족은 오래된 가족 관념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가족계획 실천을 확대하였다. 출산 통제는 원하는 성을 감별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아이를 낳지 않을 수 있는 기술의 확대로 인식되었다. 다른 한편 가족계획의 보다 광범위한 실천을 위해 국가는 부계가족 이념과 부부가족 이념을 절충적으로 통합하고자 했다. 아들 딸 차별하지 말고 잘 기르자는 홍보를 열성적으로 펼쳤을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금지직종을 대폭 줄이고,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로 노동자 딸의 부양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였다(조남훈, 1988; 왕혜숙, 2013). 가족계획의 실행은 정부의 우선적인 관심이거나 계획은 아니었지만 여성계 입장에서 1950년대 이후 지지부진했던 가족법의 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⁴⁾. 지속된 가족법개혁을 통해 여성들은 딸, 아내, 어머니로서의 지위를 확대해갔다(이동진, 2002). 성별화된 규범으로 여성의 사회, 경제적 참여가 제약되었지만, 가족의 중심된 주체로서 여성 정체성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발전과 부계, 부부가족 이념을 절충하면서 근대적이며 가부장적이며 갈등적인 젠더, 가족관계의 미시적 기초가 형성되었다. 근대 가족의 관념과 젠더 세대관계가 복합적이어서 부모 부양의 책임이 강조되고, 성과 재생산의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파트너로서 부부관계가 권위를 갖고, 자식 교육을 위한 부모의 헌신이 강조되었다.

가족계획은 발전주의 사회의 엔진이자 인구통치 원리가 되었다. 가족계획 사업을 통해 근대사회가 추구한 발전과 근대가족의 원형적인 관념이 삶의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 침투하였다. 가족계획은 발전과 가족재생산을 위하여 인구조정이 적극적으로 시작되고 심화된 과정이다. 출산 조정의 가치, 태도, 지식, 방법을 널리 전파하는데 효과적인 결과를 가졌고 나아가 경제발전의 도구로서 재생산 가치를 공고하게 하였고, 갈등적인 근대적 가족 관념을 구성하였고, 성별화된 젠더 정체성을 구조화하였다. 계획적인 출산, 양육과 교육은 행복한 가족과 잘 사는 나라의 토대로서 이상화되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에 개입한 선례가 없는 생명 통치였고, 한국 사회의 근대화를 이끌 주체화 기획이었다(김홍주, 2002).

이런 발전과 근대가족의 욕망 속에서 출산율은 매우 급속하게 떨어졌고 이것이 더 나은 사회로의 이행이라는데 의심하지 않았다. 사회, 국가, 개인의 입장에서 생산과 재생산의 질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었다. 젠더, 세대, 계층 불평등과 공정성에 대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지만 발전의 결실에 대한 암묵적인 희망 속에서 갈등이 봉합되었다. 그러나 균형은 오래가지 못했다.

2) 발전주의와 근대가족의 욕망과 이탈의 평행선

1990년대 말 부터 인구 수치에 이상한 예후들이 감지되기 시작하였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졌다. 가족계획이 성공하였다는 자신감으로 예의 주시하지는 않았지만 합계출산율 1.7 정도에서 안정화되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 1987년에서 시작된 제5차 경제개발계획의 비전이기도 하였다(조남훈, 1988). 출산율이 성공적으로 떨어진 상황이라서 이제 출산율이 안정화되면 인구문제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던 차였다. 낙관과 미온적인 방관이 우려의 시각으로 전환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 대량의 실업 쇼크와 이어진 구조조정과 연관되었다. 실업인구가

4) 1976년 정부의 종합인구정책의 바람을 타고, 가족법개혁 세력이 힘을 받는다. 동성동본혼인문제 신고센터가 1977년 만들어지고, 민법이 부분 개정된다. 1977년 개정에서는 부모의 친권 공동행사, 귀속불명재산의 부부공유제, 법정재산상속분의 균등화, 남녀 모두 20이상 이면 부모 동의 없이 혼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늘고 고용구조가 유연화되면서 누구나 꿈꿀 수 있던 사회 이동의 문이 빠르게 닫혀졌다. 비슷한 시기 만혼화 추세가 뚜렷해졌고, 노년의 고독, 가난, 소외 문제가 심화되었다.

1990년대 말 이후 출산율이 급속히 떨어진 주요 원인은 만혼화 요인이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인의 평균초혼연령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빠르게 증가했다. 급속히 진전되는 만혼화의 원인에 대해 논의되었다. 과연 경제적 충격의 일시적 현상인지, 경제적 불안 때문인지, 가족의 위기 때문인지, 여성들의 저항인지, 개인주의적 삶의 등장인지, 사회 변화의 복합적인 차원들과 저출산 사이의 연관을 주목하는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⁵⁾. 여러 논증을 통해 필자는 만혼화가 젠더불평등, 발전주의, 가족주의의 내적 모순에서 파생된 삶의 위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박경숙, 김영혜, 김현숙, 2005). 성별화된 사회 제도에 타협하였던 발전의 욕망은 노동시장의 분절화와 심화되는 계층 구조에서 좌절되기 쉬웠고, 청년기 일과 가족으로의 이행과정에 커다란 균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사회조직의 기본 원리로서 발전과 근대가족 논리는 여전히 공고하지만, 누구나 원하는 발전과 근대가족을 실현하지 못하는 이탈 현상이 늘어났다. 근대적 삶의 두 터전인 일터와 가정의 균열이 성, 연령, 계층을 넘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어렵고, 어렵게 얻은 일자리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제도적 안전망이 취약한 사회에서 일자리의 상실은 소득 안정, 독립, 돌봄, 사회적 인정 등 기본 삶의 조건을 위협하였다.

이렇게 발전과 근대가족을 지향한 삶의 욕망과 기회의 균형이 깨진 것은 역설적이게도 점점 심화된 발전주의적 행위와 제도 때문이었다. 근대화가 심화되면서 한국사회는 맬더스가 꿈 꾸는 것 보다 더 적자생존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가 되었다. 맬더스는 생산과 재생산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자유경쟁을 통한 적자의 선택이 가장 이상적인 선택과정이라고 강조하였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평등한 자유경쟁에서 건강한 노동력이 재생산되고 생산을 증대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유경쟁은 선, 덕, 이타주의가 아니며 문명화된 지성도 아니다. 오히려 자유경쟁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빈곤과 재앙스런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한 자기애적인 투쟁이라고 설파한다. 불완전한 사회를 제한적인 의미에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이라고 믿었다. **“재생산과 생산의 불균형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없는 불행과 악으로 균형점을 얻는다. 게으름과 탕진에 대한 통제가 없어진다면, 그래서 남자가 독립된 가족을 유지할 전망이 없이 결혼한다면, 보통 사람들의 행복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 결핍과 병으로 억압되는 것보다, 의존적 빈곤에 대한 두려움으로 통제를 하는 것이 더 낫다”** (Malthus, 1798; 34-35).

맬더스의 이런 예언이 현대 한국 사람들의 일반심성과 매우 맞닿아 있다는 것이 놀랍다. 맬더스의 냉정한 주장은 200여 년 동안 구미 사회 뿐 만 아니라 제3세계 대부분의 사회에서 근대화의 교리서자 청사진이 되었다. 근대의 주체는 성공의 열매를 따고 싶은 욕망에서 평등하다. 기여와 능력에 따른 분배와 불평등은 정의롭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은 불행이지만 그럼에도 도덕적으로 건전한 보통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200여 년 전 구빈법을 반대한 사람의 정서가 오늘날 한국인들에게도 공유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국가제도는 훨씬 도덕적으로 훌륭

5) 동아일보, 2005년 4월 21일. <위크엔드 포커스> 결혼? 인생을 일로 승부하는 거야!, 조선일보, 2005년 6월 21일, <600만 싱글의 힘> “우리는 대한민국 싱글 프린티어”, 동아일보, 2005년 7월 12일, <2005 한국의 결혼풍속도> “이런 배우자를 원해요”, 중앙일보, 2005년 7월 22일, 만남서 결혼까지 가장 따지는 건 학력, 돈, 용모 순.

한 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한다고 분괴한다. 열심히 산 사람은 어렵게 살고 있는데, 자신보다 훨씬 여유 있거나 생활이 방만한 사람들이 속임수로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한국인이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은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과도 깊이 연관된다(전성표, 2006). 한국인의 공정성 인식은 멜더스적인 공리사상과 유사하다. 능력과 기여에 근거해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약자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인생의 성공은 지위, 힘, 권력, 재산에 달려있고, 이를 쟁취하기 위해서 생애초기부터 경쟁에 뛰어들다. 그런데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과 성실함만으로는 부족하다. 업무에 관련된 능력 외에도 공식, 비공식 관계로 정, 신뢰, 힘을 쌓아야 한다. 은연중 조직원리는 힘의 지배-종속 관계로 변하였다. 성, 학벌, 혈연, 지연, 가족의 힘이 사라진 게 아니라 능력 요인과 결합되어 인격적인 상관부하관계로 구성된다. 최근 각종 조직에서 권력폭력이 불거진 것은 조직생활 전반에 권력에 의한 지배-종속 관계가 작용하고 있는 징후를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

발전이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을 통제하는 힘이 소수에 의해 독점화되고, 권력자의 취향에 맞춰 생존이 선택되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편으로 중심은 더욱 높은 자리에 공고화되었지만, 중심 가치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구가 대량 배출되기에 이른다. 이것이 높이 오를수록 강해질수록 그 기본이 무너지는 발전주의적 사회와 삶의 역설이다. 더 나은 삶을 욕망하지만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중장년 삶은 불안하고, 노후에 대한 불안과 고립이 심해진다. 원치 않는 경쟁이지만 이기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불안으로 많은 사람들은 경쟁의 논리를 재생산하는 들러리로 살아간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각자도생, 정글의 법칙에 따라 살아간다.

결국 강자만 생존하는 인구/생명 통제 게임은 성공할 수 있는 성원만이 태어날 자격을 갖는 재생산의 통제로 이른다. 멜더스는 인간사회의 중요한 균형으로 재생산과 생산의 균형을 강조했다. 그리고 균형이 깨지는 것은 생산의 한계를 넘어서는 생식/재생산의 본능 때문이라고 가정했다. 그래서 노동윤리와 모범적인 가정생활이 인간사회의 균형과 발전에 중요하다고 설파한다. 그러나 현재 생산과 재생산의 불균형이 다른 방향에서 작용하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여전히 생산은 한계가 없을 것 같이 확대되고 있다. 국가 단위를 넘어서 시장은 지구적으로 통합되었고 자본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땅, 노동력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사람의 가치가 노동력, 능력, 힘으로 평가되고 경쟁하게 된 결과 재생산이 크게 약화된다. 이것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저출산의 뒷이다. 한국사회는 명문대학교와 좋은 일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가족이 필사적으로 뛰어들 결과 청소년들의 교육 성취가 부모의 지위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성적을 제일 우선시 하는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불행감과 폭력이 일상이 된다. 오직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적 자본 뿐이라는 믿음 속에서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청소년들도 어릴 때부터 교육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먼저 앞서기 위한 경쟁의 압력이 청년들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가정을 형성한다는 것은 그 자체 지위 행위이며, 많은 이에게는 심각한 부담과 비용이 드는 위협이다. 결국 가족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거나 거부한다. 불평등/계층화, 젠더불평등, 발전주의 욕망이 엮어져 이처럼 생산과 재생산의 불균형, 욕망과 현실의 갭, 성평등의 기대와 현실의 갭이 커진다. 출산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자녀 양육의 비용부담이 크고, 삶의 피로와 불안감이 압도한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출산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정도 크게 약화되면서 재생산은 부담에서 혐오의 대상으로 부정된다.

지난 몇 십년 동안 여성의 삶의 갈등은 심화되었다(강이수, 2007; 박수미, 2002; 이시

균, 2017; 은기수, 2018). 노동시장의 성불평등과 여성에게 배타적으로 부과된 가족 돌봄의 규범이 여성의 주체적인 삶을 크게 제약하였다. 여성 교육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성별화되었고 여성의 노동은 대체로 주변적이고 비숙련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여성 삶에 강하게 작용하는 가족 돌봄의 규범은 많은 여성들이 노동경력을 포기하게 만들고, 일과 가족 역할의 이중적 과부하를 심화시킨다. 가족과 노동에서의 갈등과 이에 대한 대응이 점차적으로 계층화되면서 젠더관계는 가치, 관계, 정체성 차원에서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한국사회의 젠더관계는 갈등적 성별화로 해석될 수 있다(김이선, 박경숙, 2019).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성역할 규범이 충돌한다. 또 어떤 이는 성별화 규범을 수용하지만 기대했던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규범, 제도, 개인의 삶과 인식에서 젠더 관계가 모순과 균열을 심각하게 야기한다. 이런 모순과 혼돈에 대한 대응은 다양하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개인적 사회적 자본을 총동원하여 일이나 가족이나 완전한 삶을 취하는 전략을 취한다. 2000년대 이후에는 주로 고학력·전문직·상위 계층의 여성들이 개인, 가족적 자원과 복지정책 덕택에 일가정 양립 생활을 실천하고 있다(김이선, 박경숙, 2019). 경쟁의 정글에서 우위를 점한 청년들은 부모의 지원을 받은 경우가 많다(권오재, 2017). 반면 경쟁에서 밀려난 청년들에게 결혼과 가정생활은 사치로 인식되기도 한다.

IMF 외환 위기 이후 진행된 일련의 사회체제의 변화과정은 노년의 불안 수위를 몇 갑절 증폭시킨 대지진이었다. 실업과 파산신청을 한 사람들이 거리로 산으로 모여 이룬 무리에는 노년도 있었다. 아니 노년은 구조조정의 고통을 몸소 겪었던 사람들이 향한 거리에 누구보다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오히려 노년은 동료의식을 가졌을 수 있다. 이미 이전부터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는데 다른 타자들이 그에게로 찾아온 것이다. 성장과 풍요를 낙관하는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취급된 노년이었는데, 이 낙관의 허구를 경험한 사람들이 대량으로 출현한 것이다. 그러나 그 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경제체제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생사를 헤매는 역병을 치른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는 훨씬 냉혹해졌다. 자신과 가족 이외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누구나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성장에 대한 낙관의 믿음은 깨졌지만, 생존을 위한 발버둥으로 성장 신화에 더욱 빠져 들어갔다. 삶에 대한 불안은 현재의 안전 뿐 아니라 미래의 안전을 전시하는 상품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아무리 안전과 풍요를 보장하는 자원을 축적하여도 삶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아무리 많은 업적과 자격증으로 자신의 능력을 포장하여도 그 자신감이 어느 순간 땅으로 곤두박질치는 불안이 심연에 가득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노년의 거리를 떠났고, 노년은 더욱 외진 곳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노년의 목소리로 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더욱 협소해졌다. 그리고 노년을 부담스러워 하는 사회의 시선을 받으면서, 사회에 피해가 되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 하면서, 노년의 목소리도 그를 분리시킨 사회의 목소리를 더욱 모방하게 되었다. 외부로부터 강제된 ‘성공적인 노년’ 담론은 이제 노년 내면에서 우리나라의 목소리로 인식되었다(박경숙, 2009: 102-103).

노년의 삶은 발전과 강함을 중시하는 사회 속에서 주변화되었다. 노후에 대한 가족부양은 신화였다. 발전의 이름으로 봉합하였던 정상 가족 관념 내부의 갈등은 상속과 부양의 관념 사이의 혼돈을 심화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 아들 선호 사상이 컸다는 것은 대를 잇고, 노후부양에 대해 자식에 거는 기대가 최근까지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녀 성공을 위해 헌신하였지만 아들로부터 노후 부양을 기댈 수 없는 처지로 빈털터리가 된데 내적 인지부조화와 갈등이 크다. 가족에 헌신하였는데 가족과 멀어지고 사회 전체의 부양 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인생의 허무함과 사회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다. 더하여 노년에 대한 차별시선이 작용한다. 권위주의, 남성중심성, 국가주의를 내면화한 세대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사회에 쓸모없고, 나약하고, 남에게 의존하는 집단이라는 편견이 더해져 노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감정을 조장한다.

노년의 위기는 이렇게 발전, 젊음, 강함, 생산성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다기적인 가족관념 속 심화된 젠더갈등과 도구화된 가족관계로 인해 가족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이런 세속적인 박탈 뿐만이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는 노화와 죽음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영적인 고통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 삶의 조건이 해체되고 세계와 연결이 끊어지고 자아가 부서지는 과정에서 어떤 진정한 치유의 돌봄을 받기 어렵다(박경숙, 2015).

이처럼 성장, 발전, 가족이라는 정상논리에 이탈하는 삶이 많아지는 것은 개인의 삶과 정체성에, 그리고 사회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노정시킨다. 성별화를 매개한 발전과 가족의 열망이 좌절된 결과 젠더, 세대, 계층의 인지부조화와 상호 갈등이 심화된다. 정상의 규준에서 이탈한 삶들은 정상의 삶을 욕망하지만 좌절하고, 비자발적인 상황논리와 사회적 불인정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또한 동화하지 못해 좌절하고, 완전히 분리되지 못해 방황한다. 국가주의, 발전주의, 가족주의를 옹호하는 입장과 저항하는 입장이 우리 안에 갈등한다. 국가주의, 권위주의 체제를 저항하는 세대 안에도 정상 가족, 발전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도 많다. 각기 근대화를 성취하였다는 훈장을 다르게 기억하고 과거를 신화화하려 한다. 정상에서 이탈하는 것은 위기이므로 다시 정상으로 복귀하려 한다.

어렵듯하게 발전주의와 근대가족 체제에서 갈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 부류로 구분되는 것 같다. 하나의 집단은 가장 중심에 속한 집단으로서 발전과 성공을 위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완벽한 인간 발달을 실현하기 위한 질주를 멈추려 하지 않고, 성공한 자들을 선택하는 사회시스템이 공정하다고 믿는다. 수적으로는 작을 수 있지만 사회의 중심된 여론과 제도를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발전주의와 근대가족의 논리에 의해 정상집단과 위기집단을 구별한다.

두 번째 부류는 발전과 가족의 친밀성과 부양을 욕망하였지만 성공, 친밀성, 돌봄, 부양의 기회를 획득하지 못한 사람들 중 다수를 포함한다. 이들은 성공, 발전, 근대가족을 욕망한다. 국가주의, 발전주의, 가부장 사회를 황금기 근대로 신화화하고 현재로 소환하려고 하는 보수적 여론의 기층세력이 포함된다. 과거를 소환하는 목소리를 부추겨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서 가족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보수적 정책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수적 인구정책은 젊은 여성들에게 상당한 저항을 불러 일으켰고 실효성이 없었다.

세 번째 부류는 이 시스템에서 적응하는데 실패하고, 다른 세계를 원하지만 그 세계가 무엇인지 방황하는 나머지 집단이다. 감정, 욕망, 자아가 부서지는 방식과 정도, 세상에 대응하는 방식이 혼돈스럽다. 어떤 이는 욕망과 현실의 조건에 괴리가 심한 것을 인식하고 박탈감을 갖고 분노하고 저항한다. 발전과 근대가족을 욕망하였지만 성공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이 불평등한 사회구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자신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의 대열에 합류한다. 더러는 더 이상 인생의 목표로 성공, 성취를 추구하지 않고 가족의 의미를 재발견하거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소위 많은 약자 집단이 포함된다. 이들은 삶을 통해 만성화된 배제와 차별 경험에서 강자로서의 주체성을 갖기가 어렵다. 그러기에 강한 주체가 되고자 하는 욕망과 그로부터 좌절의 감정이 앞의 집단에 비해 그렇게 강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들 집단의 더 깊은 상처는 나약함과 부서짐의 고통이다(박경숙, 2015). 사회에서 차별받고 무력하고 존재감이 없는데 비참해하고 절망한다. 나

를 헌신하여 살았는데 사회로부터 무시당하는데,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원망하고, 쓸모가 없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갖지 못한 인생이 허무하고, 외롭게 죽어가는 것이 두렵다. 물론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부서짐이 종말이 아님을 깨닫고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3. 인구정치와 정책적 딜레마

1) 위기의 정치

사회의 어떤 현상이 위기로 인식되는가는 사회의 중심된 가치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내적인 동기와 저항과 갈등이 어떻게 각축하는지를 보여준다. 인구학자로서 필자는 매우 낮은 출산률은 사회 차원에서나 개인 차원에서 위기의 징후라고 생각하였다. 재생산이 중단되면 생산능력도 제약되고 세대간 사회의 부양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더욱이 저출산을 유도한 상황이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며 근대성의 내적 모순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저출산 현상을 사회의 위기 징후로 생각한다. 한편 저출산이 과연 문제인가 질문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우선 청년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 지금처럼 살기가 힘든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국가경제를 위해 출산을 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구조와 의식의 복잡한 연관을 명료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였지만 재생산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생산만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직관적인 저항관념일 수 있다. 청년세대는 출산장려 보다 삶의 안전을 약속하는 사회 담론이 주가 되지 않는 것이 의아하고 화가 날 것이다. 또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생산, 재생산, 가족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는 문화가 확대되는 것도 주목된다(정민우, 이나영, 2011). 학계에서도 위기 진단이 갈라진다. 젊은 청년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지금과 같이 살기 힘든 상황에서 결혼과 재생산은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과 나아가 저출산이 어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인구 압력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예견도 제시된다. 이처럼 저출산 고령화가 위기인지, 어째서 그런지를 둘러싼 논란은 인구에 대한 국가와 시민사회 내부의 다양한 관점들과 갈등, 혼돈 상황을 드러내 주었다. 한편에서는 정상가족, 발전주의, 국가주의 관점에서 저출산이 문제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또한 이를 시대착오적인 관점이라 응수하면서 대응 논리로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이 대두된다. 이런 양극단의 논란이 지배적인 것은 아직 저출산 이슈를 사회와 삶의 문제와 연결하여 성찰하거나 적극적인 의미의 새로운 삶의 실천과 연결하여 생각하고 논하는 것이 혼돈스러운 상태임을 드러낸다.

고령화 사회와 노년의 삶에 대한 진단도 혼돈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다. 빈곤, 소외, 돌봄의 긴장을 사회의 기강이 무너진 결과로 파악하며 어르신들의 권위를 복귀하고 다른 나라에서 처럼 효도법이나 자녀부양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⁶⁾. 이런 입장을 드러내 놓고 반격하지 못하면서 또 동의하지 못하면서도 노인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혁의 과제가 오래 동안 방치된 것은 노인복지정책의 커다란 실책이다. 자녀의 교육, 직업, 결혼 성공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노후에 대한 책임은 노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자녀가 실질적인 부양자가 되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노인 스스로

6) 효도법 담론에 대해서는 박경숙(2007)을 참조할 수 있다.

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제도적으로 상당히 제약된다. 부계가족과 부부가족 원리가 결합된 민법의 규정은 현실의 다양한 세대, 부부간 부양 관계와 상당히 괴리를 갖는다. 그 괴리를 좁히기 위해 부부중심 가족단위로 법제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데 이 또한 상당히 다양한 삶의 현실과 괴리된다. 노인의 경제생활 안정화를 위한 노동, 사회보장제도의 개혁도 역시 미진하다.

이처럼 저출산 고령화가 체감적으로 삶의 위기로 경험하고 있는데, 위기의 실체를 진단하는데 상당히 혼돈스러워한다. 이는 발전과 근대가족의 이념에 기초한 근대성이 깨트려지는데 대한 불안과 저항일 수 있다. 발전과 안정된 가족을 이루지 못함에도 정상 가치에 동화하려는 열망이 강하다. 지배적 가치의 내적 모순을 성찰하고 대안의 삶을 찾고 싶지만 당당하게 행동하는데 조심스럽다.

사회구조와 자신 삶의 내적 모순을 직시하고 개혁의 과제들을 실행하는데 시민사회의 성찰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1990년대 후반에서 10년 기간 인구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정부는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화 사회 장기대책을 내놓고 있다. 보수정권과 진보 정권에 걸쳐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방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저출산, 만혼화, 과도한 자녀양육비, 청년실업, 노인빈곤, 돌봄체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간 협력과 노력과 재정적 지원을 강조하였다(정성호, 2018). 정부, 민간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문제 진단과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만이 많다.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체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너무도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가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뒤에도 별로 효과가 없다면 성숙과 결실의 시간문제로 인내할 사안만은 아닐 것이다. 더 실질적인 정책의 문제가 존재한다.

2) 고도 경제성장 황금기 신화 정책의 실패

정책 실패의 중요한 요인은 위기로서 파악하는 관점 자체에 비롯한다. 기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정책은 성별화 관념을 전제한 정책 구상이었다. 젠더평등의 실질화, 다양한 친밀성의 실질화, 보육의 사회화,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구조들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함에도 사회 시스템의 내적 모순을 그대로 둔 채 무늬만 젠더평등, 선심성 출산장려금 지원 수준이었다. 여성만이 일가정 양립 정책의 지원을 받아야하는 대상으로 호명됨으로써 여성은 성별화된 일터에서 새로운 차별의 위협에 처할 수 있다. 최근에는 여성만을 일가정 양립의 주체로 가정하는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고 남성도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공동 주체로 설정하는 '아빠 육아휴직제도'와 같은 제도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이 역시 한계를 갖는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는 일터에서 시행되는 정책이지만 그 목표는 가정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족정책의 성격을 가진다. 노동자로서의 여성 생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나 불평등 구조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아닌 것이다.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의 시선이 근절되지 않았다. 여성이 평등하게 인식된다면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혹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 최근 낙태법 폐지 논란에서처럼, 시민사회 내부에도 여성의 자율적인 재생산권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아이의 생명권을 옹호하는 모순적인 태도가 강하다.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면 마땅히 여성의 자율권, 재생산권, 양육권도 보호해야 한다. 후자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전자만을 운운하는 것은 성불평등한 인식이다.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은 정상 가족 관념에 기초함으로써 다양한 삶을 제도적으로 포용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일 가정 양립정책이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이뤄진 가정에 한정됨으로써 비혼의 삶, 일중심형 생애, NEET형과 같이 다양한 비혼의 삶, 혼자 사는 삶을 제도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성별분업의 규범이 독립성과 돌봄을 둘러싼 젠더 갈등을 심화하였다면 일과 가정 양립은 자칫 정상 가족 규범 밖의 다양한 삶, 비혼의 삶, 무자녀의 삶, 한부모 등 다양한 삶의 양식을 부정하는 정상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보수 정권에서 특히 문제시 된 정책 관점은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안위를 우선시 하면서 개인의 삶을 진단하고 개입하였다는 것이다. 어떤 인구는 노동력이고 생산성이고 성장의 자원이고 어떤 인구는 사회적 부담이라는 인식을 공공연하게 확산시켰다. 국가가 어떻게 국민의 삶에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보다는 부국에 기여하는데 국민이 동참해야 하는 관점을 심화시키려 하였다. 기존의 인구 정책이 국가주의적 관점이었다는 비판을 의식하여, 개별 삶의 질에 주목하려한 방향성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거대한 논리는 선하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선하지 않았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정책이 전달된 방식은 상당한 파행적이었다. 위에서는 지지만 할 뿐 구체적인 정책의 실행에 있어 권한과 책임 당사자가 분명치 않은 현상은 곳곳에서 나타났다. 각종 위원회는 민의를 수렴한다는 요식 행사로 소집되는 경우가 많았다. 선의를 갖고 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도 정부와 민간의 갑을 관계, 연줄 쌓기 같은 분위기에 실망하고 이탈하였다.

국가는 권력기구이지만 국민 모두의 권력을 대변한다. 특권층의 이해가 우선시되면 공공선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진다. 그러나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국민을 대표하는 인식과 책임이 상당히 약하였다. 어찌 된 일인지 정책들이 있는 자들을 더욱 배불리고, 사회 불평등을 심화하는 결과로 끝났다. 정치권력, 경제권력, 언론, 지식인들의 개혁발상은 상당히 시대착오적이었고, 서로 봐주며 자신들의 이득을 보편화하는 제도를 만들고 사회분열을 조장하였다.

보수 권력은 과거 권위주의 체제를 무덤에서 소환하려 하였다.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박근혜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이상한 정책으로 출산지도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다.⁷⁾ 먼저 가족계획 사업 이후 최근 인구가 정치와 정책적 주제로 소환되기까지 침묵의 공백이 있었음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가족계획을 둘러싼 성찰적인 비판과 논쟁을 덮어버리면서 학계에서는 학문의 존립이 어려울 정도로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이 없었던 것이 먼 얘기가 아니다. 정부에서는 5차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인구통제 정책기조가 유지되었고 사회 여론은 무관심으로 일관하였다. 그 상황에서 인구의 이상 예후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1996년에서 10년의 정책 휴지기 뒤에 정부가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를 발족한다. 위원회 활동 초기에는 인구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 인구학은 태생적으로 국가주의 인구통치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세대에 속한 사람들 중 일부가 인구학회의 이름으로 저출산고령사회의 정책 방향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다. 인구변동에 대한 충분한 성찰이 부재한 상황에서 가족계획의 정신이 갑작스럽게 호출되었고 출산지도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7) 행정자치부가 2016년 12월 29일 행정자치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민국 출산지도'라는 이름으로 게재된 사이트 게시물에 '가임기 여성 수'를 표시해 논란의 대상이 됐다. 관련기사는 '가임기 여성지도' 이렇게 탄생했다, 한겨레 2017. 1. 11 -'대한민국 출산지도'에 비판 쏟아진 이유, 한겨레 2016. 12. 29. - 대한민국 출산 지도? "여성이 출산 기계입니까" 오마이뉴스 2016. 12. 29.

박근혜 정부는 인구통치의 자신만만한 기억을 소환했다. 가족계획 운동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출산은 극복되어야 하는 국가적 문제로 프레임 된다. 2016년 9월 국가조정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지시하였다. 저출산 극복 사례인 우수 지자체에게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2020년까지 출산율 1.5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과 소통하고 끊임없이 실천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시하였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에는 가족계획 당시를 연상시키는 유사한 확신감이 느껴진다. 저출산은 계몽을 통해서 극복되어 하는 문제이고, 얼마나 잘 실천하는지를 과학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위해 매우 세분화된 출산 통계를 생산할 것을 통계과에 지시하였다.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목표로 그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지표를 생산하기에 이른다. 이른바 출산지도다. 당당하게 뭔가를 해냈다는 자부심으로 행정자치부는 2016년 12월에 출산지도를 발표하였다. 지자체 저출산극복 프로젝트로서 대한민국 출산지도의 문구가 다듬어졌다. ‘내가 사는 지역의 출산관련 통계, 출산지도 서비스를 한눈에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정보 서비스’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 사이트의 반응은 기대와는 달랐다. 올린 지 얼마 안 되어 여성 개인, 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내부 간담회에서도 이 지도의 의도는 여성에게만 출산의 책임을 전가하고, 여성을 계몽의 대상이나 힐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여성으로 하여금 도구가 되고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고 비판되었다. 학술적인 용어였던 출산이 정부의 국가, 남성주의적 의도로 남용되면서 여성들에게 혐오의 용어가 되어 버렸고 일부 여성 단체와 학자들은 출산이라는 용어를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⁸⁾ 이처럼 보수정부는 인구 문제가 배태된 생명과 삶의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상당히 희석시키고 국가중심 남성중심 기술중심의 인구 통치 관점을 실행하려하였다. 출산지도 사건은 전문가, 정책 담당자, 각종 위원회가 얼마나 사회변화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고, 국가를 우선으로 전문성을 내세워 사회문제를 탈정치화한, 그러나 실체는 국가 권력과 지배집단의 이해를 옹호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불안을 은폐한 정치였다. 국가는 여성을 출산하는 몸으로 인식하는 여론을 집단적으로 조장하고 여성에게 출산을 강제하였다. 각종 정부 정책 연구소, 위원회, 정책자, 상당수의 언론은 저출산을 문제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원인이 된 중요한 민생의 위기를 정책의 핵심 의제로 제대로 보지 않았다. 출산을 높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쏟아내는 가운데 여성 일반을 이상하게 보는 사회의 이상한 시선을 조장하였다.

한편 기성세력의 이상한 시선을 비판하고 희화화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이 인구,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서 매우 적극적인 사회변동의 주체로 탄생되는 과정을 함축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위기담론을 통해, 출산지도 사건을 통해 생명, 재생산, 인구가 우리사회의 젠더불평등, 가족주의, 그리고 사회불평등의 모순을 집중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화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부서짐의 두려움

김홍중 교수는 파상의 시대는 과거의 꿈과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새로운 꿈 사이에 긴 ‘환멸’이 전개되는 시기라고 고백한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꿈결에 취해 있고 성급한 자들은 미래를 어설픈 상상으로 봉합하고자 한다. 그러나 꿈과 꿈 사이의 환멸을

8) 약효없는 저출산 정책, ‘저출산’ 용어 뺀다, 동아일보 2017. 9.7.

는 그대로 꺾어내는 힘, 그리고 희망의 근거를 그 파편들 속에서 찾아내려는 자세, 그것이 바로 과상력의 핵심이다. 문구가 강하게 마음에 꽂힌다(김홍중, 2016: 11-12). 환멸과 혼돈과 두려움, 분노를 꺾어낼 수 있는 힘, 그리고 완전하게 부서지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 힘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닌가.

진보정권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었다. 정부도 노동권 보호, 지역균형, 젠더 평등, 교육 평등의 과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혁다운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회개혁의 주제는 명확한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출산률이 올라가지 않았다. 생활세계의 위기에 대한 징후들이 지속되지만 개혁다운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교육 격차, 불안전 노동이 만성적인 생애 불평등과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정책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개혁이 지지부진함은 불평등을 지배하는 힘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개혁의 실패는 불평등 힘 때문만은 아니다. 지지부진함에는 발전과 정상가족체제의 틀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한다.

발전, 나은 삶, 강함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습관이 일률화되었다. 증식과 팽창이 당연하고 정지되거나 축소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증식, 축소, 쇠퇴, 감소의 의미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다. 그러나 지금의 조건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 아닐 수 있다. 생존의 위기가 도래할 때 모두가 죽는 게 아니다. 살아남기 위해 생명은 진화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지금의 인간이 다 사라지는 상황이라도 지금보다 생존에 적합한 어떤 생명이 등장할 수 있다. 또 소수의 깨어 있는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지금 인간 세계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도 있다.

부의 총량,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사회는 놀랄만한 성취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발전이라는 프레임으로 세상과 자아를 인식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은 단혀 버리고 내면의 불안은 깊어갔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무엇이 새로운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발전중심 사회체제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인구위기론은 많지만 근대성을 극복하는 사회전환을 촉구하는 인구변동에 대한 담론은 억눌려진다.

많은 지역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 재생의 동력을 어디에서 찾을까 고민한다. 그런데 주요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인구를 보전하는가, 특히 출산을 회복하는가에 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고령화 문제가 더 심각한 지방에서도 지속 성장 프레임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기술에 운명을 거는 입장이 가세하여 설령 노인만 살게 되도 기계가 생산, 복지, 발전을 담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노인 한명, 아이 한명을 돌보기 위해서 마을이 필요하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경제에만 초점 지워지고 아이들과 노년의 삶의 요구는 경제, 발전의 구호에서 묻혀진다. 노인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이상주의적이고 매우 비정치적이다. 사실은 매우 정치적인데 사회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정치화를 두려워한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노동시장, 상속, 친자권, 부양권과 같은 법적, 제도적인 개혁이 불가피하지만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사회보장과 가족부양에 대한 관념이 세대, 젠더, 계층에 따라 상당히 갈라져 있는 상황 때문이기도 하다. 한쪽에서는 효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한쪽에서는 부부중심의 가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년은 상당히 개별화되고 상당히 다원화된 관계에서 경험한다. 중장년세대가 노부모 돌봄을 기피하는 여러 요인 중에는 상속이나 가족관계의 세대, 젠더 간 불평등과 불공정성 요인이 존재한다. 현 중장년 세대는 노부모 부양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자녀세대에게 부양을 기

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족 중심의 사회 제도와 현실의 부조리가 커지고, 그 결과 노년의 생활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커지고 있다.

노인의 소외가 심화되고 노인 돌봄이 위태로운 것은, 가족, 지역사회, 공동체의 위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불편한 생활세계는 장애인을 양산한다. 노년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는 노인이 지역 환경에서 살아가기 어렵게 한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게 되고, 소통하지 못하여, 사회적 단절로 인해 치매를 겪을 위험이 크다. 생산, 젊음, 능력, 효능을 강조하는 환경이 사회적 부적응자를 양산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어느 부분에서는 활동력이 유지되고 판단력도 분명하다. 쇠퇴의 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분명 있다. 익숙한 공간은 혼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공간은 혼자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진다. 편리함과 신속한 유통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간에서 노년은 활동하기 어렵다. 점점 혼자서 할 수 있는 활동능력이 쇠퇴하게 되면 생활공간이 축소하게 된다. 활동의 정도는 단순화되고 느려진다. 그에 맞추어 보조하는 것도 주민의 배려일 수 있다.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충분하게 돌봄과 활동, 사회적 참여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커뮤니티 케어는 노년 관련 세미나에 올해 빈번하게 올려진 주제이기도 하다. 이념적으로는 아주 이상적인 돌봄 모델이다. 10년이 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 인식과도 맥을 같이 한다. 병원중심의 의료가 충분한 돌봄이 되지 않고, 가족부담이 가중화되는 상황에서 돌봄의 사회화 캐치프레이저로 도입된 제도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회적 돌봄시설과 서비스가 매우 빠르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의료, 보건, 복지 사이 연계가 잘 안되면서 중복, 사각지역, 비용 문제가 관리되지 않았다. 노인들의 기초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훨씬 더 욕구에 밀착된 서비스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수 있다. 저소득층 지원 중심의 복지가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는 문제가 계속 남아 있다. 또한 누군가의 돌봄을 받기 위해서 사회의 약자가 되어야 한다면 시민사회는 소수에 의해 힘이 집중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보편적 복지의 기반은 시민사회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시민사회가 젠더, 세대, 계층, 출신국에 따라 분절화, 계층화되어 커뮤니티가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 보편적 복지의 근간은 개별적인 독립된 주체들이 아니라 서로 의존적인 주체들이다. 그리고 돌봄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우리 모두가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다.

4. 맺음말

한국사회가 경험한 인구변천은 발전 지향적 삶이 무엇인지의 의미를 성찰하게 한다. 우리는 종말의 위기에 임박해서야 우리 자신의 욕망이 만들어낸 생명에 대한 폭력을 겸허하게 반성하는지 모른다.

발전과 근대가족의 신화가 강하게 버티고 있고 이로부터 많은 인구가 이탈하는 상황에서 사회의 분단과 이탈의 고통이 파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삶의 관점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부서짐의 두려움이 극복되어야 하는 것 같다. 우리 안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욕망과 좌절과 분리의 뒷에서 나오는 길은 역설적으로 스스로 부서지는 것일 수 있다. 발전의 가치가 강화하는 욕망들이 있다. 능력, 향노화, 성공적 노년, 젊음 중심의 삶. 경쟁, 힘, 새로운 차별과 신분화다. 제도, 생활세계, 의식에서 강하게 우리를 조작하고 있는 발전주의 명령을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 생산성, 경제적 효율성, 성공, 발전의 관점이 지배하면서 삶이 심각하

게 훼손되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성공, 발전, 힘만이 삶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눔, 겸손함, 돌봄, 친밀성이 삶의 든든한 토대가 된다.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삶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상의 관념을 의문시하는 용기도 서서히 모아지고 있다. 중심의 힘은 발전의 논리로 이탈한 생활방식을 다시 중심을 욕망하게 하고, 동화하려고 하지만, 동화를 포기한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생존의 공간이 만들어진다. 젊은 여성들이 정상관념을 질문하는데 앞장을 섰다. 사회적으로 호명된 젠더성을 질문하고, 몸, 재생산의 자율권을 주장하고, 일상에 지배적인 성희롱, 성차별을 문제시하는 운동이 급진화되고 있다. 이 보다는 온건하지만 빈곤한 공간에 성소수자, 장애인, 가난한 노인, 청년들이 모여면서 중심에서는 불편하거나 잘 해석되지 않는 풍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부서짐이 죽음이 아니라는 희망을 보여준다.

사회적으로는 사람들을 실패하기 쉬운 열망에 가두고 좌절에 따른 고통에서 방황하게 하지 않도록 다양한 삶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포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불공정, 불신, 혐오를 촉발하는 불평등 기제를 개선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삶의 방식을 틀 지우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어느 하나의 배타적인 성원의식을 강조하기 어려운 시대다. 힘의 독점과 경쟁은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국가주의, 민족주의, 능력주의, 권위주의, 불평등과 차별 속에서 자율성과 다원성은 억압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잠재력이 사장되지 않는 교육, 노동, 복지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다양성이 보장되고 불평등이 개선된다면 저출산 고령화가 부담만이 아닐 수 있다. 활동적이고, 공유하고, 익숙한 관계 속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다. 다양화되는 삶의 양식과 점점 괴리가 커지고 있는 가족, 노동, 복지 제도의 개혁이 지속되어야 한다. 표준적 정상가족과 위기 집단으로 차별화하지 않고 다양한 삶을 제도적으로 포용하는 설계가 요청된다.

참고문헌

- 강이수, 2007. “산업화 이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일-가족 관계,” 『페미니즘 연구』 7/2: 1-35쪽.
- 공세권, 김승권, 조애저, 1992. “가족계획사업의 개편방향에 대한 소고- 1991년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15/2.
- 권오재, 2017. “결혼의 계층화와 전통적 성 정체성의 고착; 부모 자산이 성인 자녀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이선, 박경숙, 2019. “한국 여성의 생애: 갈등적 성별화와 계층화” 『경제와 사회』 122.
- 김택일, 1988, “한 인구학도의 회고,” 『한국인구학』, 11/1:1-
- 김혜경, 2013, “부계 가족주의의 실패?,” 『한국사회학』 47/2
- 김홍주, 2002. “한국사회의 근대화 기획과 가족 정치: 가족계획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5/1
- 김홍중, 2016. 『사회학적 과상력』. 문학동네
- 박경숙, 2007. “도덕, 정치, 경제의 연관에서 본 효도법 담론의 의미” 『가족과 문화』.
- 박경숙, 2008. “빈곤층의 생활과 의식,” 『한국사회학』 42/1
- 박경숙, 2009. “노년복지제도와 인식의 변화: 노년의 불안과 독립선언,” pp. 101-166.
- 정진성, 이재열, 박경숙, 정재기, 남은영, 장진호, 『한국사회의 트렌드를 읽는다- 국민의식

- 조사를 통해서 본 외환위기 10년』.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경숙, 2015. “임종기 노인의 고통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한국사회학』 49/2
- 박경숙, 2017. “서울 노인과 나고야 노인의 생애사와 가족변화- 근대가족의 형성과 종언의 생애사적 자취” 『아시아리뷰』 12/2.
- 박경숙, 김영혜, 김현숙, 2005. “남녀 결혼 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혼, 성역할분리 규범, 경제위기의 우발적 결합.” 『한국인구학』 29/2: 33-62.
- 박상태, 1999. “인구 쟁점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1955-96년간 우리나라 주요 신문의 사설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2/2: 5-45
- 박수미. 2002. “한국여성들의 첫 취업 진입·퇴장에 미치는 생애사건의 역동적 영향.” 『한국사회학』 362:145-174
- 배은경. 2012. 『현대 한국의 인간 재생산- 여성, 모성, 가족계획사업』. 시간여행
- 버지니아 코이니 (안정숙 옮김), 1990. 『마가렛 생겨 이유 있는 반항』. 형성사.
- 양재모, 2001. 『사랑의 빛만 지고』. 큐라인.
- 양현아, 1995, “한국가족법에서 읽은 세가지 문제,” 한국사회사학회 편, 『가족과 법제의 사회사』, 문학과 지성사
- 왕혜숙, 2013, “가족 인정 투쟁과 복지정치 :한국의 의료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7/4
- 은기수. 2018.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경력단절”. 『한국인구학』 41/2: 117-150쪽.
- 이동진, 2002, “가족이동과 가족중첩,” 김경동 교수 정년기념논총, 『진단과 대응의 사회학』, 박영사
- 이시균. 2017.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구조 및 고용안정성 분석”. 『여성연구논총』 20: 75-100.
- 이진숙, 이슬기. 2015. “일-가족 양립정책 이용이 일-가족 양립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5/1:103-138.
- 장경섭, 1992, “한국가족의 이념과 실제-가족규범의 다중성과 내적 모순,” 『철학과 현실』
- 전성표, 2006, “배분적 정의, 과정적 정의 및 인간관계적 정의의 관점에서 본 한국인들의 공평성 인식과 평등의식.” 『한국사회학』 40/6: 92-127
- 정성호, 2018,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 『한국인구학』 41(3)
- 정민우, 이나영, 2011. “‘가족’의 경계에 선 청년세대,” 『경제와사회』 89:105-145.
- 조은주, 2018, 『가족과 통치』. 창비
- 조남훈, 1988. “출산조절정책의 현황과 전망,” 『한국인구학회지』 11/1.
- 조한혜정. 1985.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족주의.” 『한국문화인류학』 17: 81-98.
- 홍문식, 1998. “출산력 억제정책의 영향과 변천에 관한 고찰” 『한국인구학』 21/2: 182-227.
- Repetto, R., 김선웅, 권태환, 김대영, J.E. Sloboda, P.J. Donaldson, 1983,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의 발전과정” 249-291 R. 레퍼트, 김선웅, 권태환, 김대영, J.E. 슬로보다(Sloboda), P.J. 도날드슨(Donaldson). 『한국의 경제발전과 인구정책』. 1983. 정화인쇄문화사. 한국개발연구원
- 유발 하라리 (김병주, 옮김, 2017). 호모 테우스 -미래의 역사. 김영사
- Guilmoto, C. Z. 2009. “The Sex Ratio Transition in Asi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8/1: 31-54.

- Lesthaeghe, R. 2010. "The Unfolding Story of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2: 211–251.
- Livi-Bacci, M. 2009. *A Concise History of World Population*. John Wiley & Sons (송병건, 허은경 역, 2012.. 『세계인구의 역사』 . 해남)
- Malthus, T.R. 1798.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London: J. Johnson.
- Mari Calderone, ed. 1970. *Manual of Family Planning and Contraceptive Practice*. Baltimore: The Williams & Wilkins Co.
- Newston, L. P. Richerson. 2009. "Why do People Become Modern? A Darwinian Explana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5/1: 117–158.
- Nie, Y. and R.J. Wyman (2005). "The One Child Policy in Shanghai: Acceptance and Internaliza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1/2: 313–336.
- Van de Kaa, D. J. 1996. "Anchored Narratives: The Story and Findings of Half a Century of Research into the Determinants of Fertility." *Population Studies* 50: 389–432.
- Van de Kaa, D. J. 2004. "The True Commonality: In Reflexive Modern Societies Fertility is a Derivative." *Population Studies* 58(1): 77–81.

포스트코로나 뉴노멀 시대 ‘저출산’, 위기인가 기회인가? -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김기봉(경기대 사학과)

1. 포스트코로나 시대정신, 뉴노멀
2. 한국사회 저출산의 계보학
3. 인구에 대한 빅히스토리 문명사적 고찰
4. 인구정책을 위한 온톨로지(ontology) 구축

1. 포스트코로나 시대정신, 뉴노멀

카오스 이론에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가진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라는 용어가 있다. 2020년 인류는 나비보다 훨씬 작은 바이러스인 코로나19로 인해 그 이전(BC, Before Corona)과 그 이후(AC, After Corona)로 시대구분을 해야 한다고 말할 만큼의 격변을 겪었다. 그런 포스트코로나 시대정신을 대변하는 용어가 뉴노멀(New Normal)이다.

뉴 노멀은 코로나19가 출현하기 전부터 있었던 말이다. 원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가 지속되면서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으로 자리를 잡음으로써 표준 자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경제 용어였다. 그 용어가 각광을 받은 것은 한국이 1차 산업혁명에서는 후진적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은 선도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잘 표현해주었기 때문이다.¹⁾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4차 산업혁명 담론이 범람한 곳도 없었지만, 일각에서는 그것이 실체가 없는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다가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인류가 그 이전 삶으로 되돌아 갈 수 없는 개벽을 일으키면서 4차 산업혁명과 뉴 노멀은 엄연한 현실이 되었다. 업무와 일상이 ‘언택트’(비대면)로 이뤄져야 하는 삶의 조건 속에서 현실 공간(real space)에서 행해진 많은 것들이 디지털 공간(digital space)으로 이동했다. 이제는 디지털 변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화로만 향해 나갔던 문명사의 흐름은 정지되고 역류가 일어났다. 이에 반해 로컬 차원에서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여 도시 전체를 신경망처럼 연결하는 스마트 시티는 더욱 강화될 추세다. 코로나19는 인간의 추진력으로는 불가능했던 것을 단번에 관철시켰다. 개혁하기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교육혁명인데, 대학이 생겨난 이후 처음으로 한 학기를 비대면 수업으로 마칠 예정이다. 문제는 그것이 이번 학기로 끝난 게 아니라, 수업방식의 전환은 물론 학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는 점이다. 전 국민재난소득, 비대면 원격의료, 전 국민고용보험

1) 천우정, 『4차 산업혁명의 뉴노멀』, 하우출판사, 2019.

등 코로나19가 창궐하지 않았다면 거의 불가능했을 정책들을 정부는 추진했고 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비정상상이 정상으로 표준이 바뀌는 패러다임 전환이 일상화 되는 뉴 노멀 현상들을 목도하면서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새삼 실감한다. 그런 발상의 전환 또한 전형적인 뉴 노멀 현상이다. 위기의 심각성을 느껴야 변화의 의지가 생겨난다. 해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위기를 낳은 질서는 이미 무너졌는데 새로운 질서는 아직 성립하지 못한 과도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말했다. 문제는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인간의 대응이다. 뉴 노멀이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부상했다는 것은 위기에 대한 재인식을 함축한다. 미래는 이미 와 있는데 인간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이 위기라는 각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과거로부터 온 메시지는 귀중하게 취급하며 관심을 기울이지만, 미래로부터 송신되는 신호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런가? 과거는 신도 바꿀 수 없는 확정된 사실이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허구라 여기는 편향성 때문이다. 상대성이론이나 양자역학에 따르면,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은 실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허상이다. 우주의 차원에서는 그런 시간 구분은 성립하지 않고,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현상이다. 과학자는 말한다. 시간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간은 우리 안에 있다.²⁾ 그런데 지구상의 유기체 가운데 인간만이 미래에 대한 시간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만물의 영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다. 인간이외의 다른 동물도 과거에 대한 기억은 갖고 현재를 살지만 미래 목표를 위해서 사는 ‘미래 중독자’는 아니다.³⁾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는 생각이 인간을 자기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규정하는 실존적 존재로 의식화 시켰고, 사르트르처럼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말하도록 만들었다. 지구상의 다른 유기체는 자연적 본질에 따라 사멸한다. 하지만 인간은 죽음의 삶 속에 프로그래밍 돼있다는 의식을 갖고 “죽음에 향하는 존재(das Sein zum Tode)”⁴⁾로 산다.

인간의 실존적 삶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확정된 과거가 아닌 불확실한 미래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과거가 아닌 미래라는 시간에 중점을 두는 인식론에 기반하여 연구를 하는가? 본인이 공부하는 역사학은 과거의 사례로부터 배우는 학문의 전형이다. 역사학자로서 요새 고민하는 주제가 뉴 노멀 시대 역사학의 존재의미는 무엇인가다. 뉴 노멀 시대에는 과거의 낡은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는 현재의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고, 오히려 문제를 문제로서 파악하지 못하는 무지의 영역만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낳는다.

그런 인식론적 한계를 지적하는 용어가 ‘블랙 스완(black swan)’이다. 원래 이 단어는 1697년 유럽인들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검은색 백조(흑고니)를 처음 발견하면서 생겨난 말인데,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Nassim Nicholas Taleb)가 2007년 월가(Wall Street)의 허상을 통렬히 파헤친 『블랙 스완』을 출간하면서 학문적 용어로 자리를 잡았다.⁵⁾ 탈레브는 인간이 예측할 수

2) 카를로 로벨리, 이종원 옮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우리의 직관 너머 물리학의 눈으로 본 우주의 시간』, 쌤앤파커스, 2019.

3) 다니엘 S. 밀로, 양영란 옮김, 『미래중독자: 멸종 직전의 인류가 떠올린 가장 위험하고 위대한 발명, 내일』, 추수밭, 2017.

4) Martin Heidegger, *Sein und Zeit* (Tübingen, 1984), S.246-267.

5)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차익종, 김현구 옮김, 『블랙 스완 - 위험 가득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남

없는 불가사의한 우연이기 때문에 충격적인 결과가 초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났던 사실만을 알고자 집착하는 인간 마음의 타성이 빚어낸 무지의 소산임을 지적할 목적으로 그 용어를 사용했다. “우리가 쉽사리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의 구조에서 기인한다. 인간은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실, 오직 사실만을 머리에 우겨 넣는다. 이 ‘메타 원리’(인간은 원리를 습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원리)를 쉽게 습득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⁶⁾

탈레브는 ‘블랙 스완’ 개념을 통해 “뒤돌아보는 쪽으로 발달된 거대한 기계”처럼 작동하는 인간의 편향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런 인간의 편향성을 극대화 하는 학문이 역사학이다. 현재에 새로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이 일어난 원인은 과거에 있고, 그것을 해명함으로써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처방 대부분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인 경우가 많다. 역사학의 유용성은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현재에 직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한다는 것에 근거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역사학의 기능이 뉴 노멀 시대에도 얼마나 유용할 수 있는 가다. 새로 출현한 전염병이 매년 심각한 이유가 바이러스는 신종(新種)인데 그것을 잡는 백신은 구종(舊種)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역사학자가 생산하는 지식이 구종 백신과 같은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블랙 스완’은 과거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것보다 미래로부터 신호를 읽어내는 것으로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함축하는 개념이다. 실제로 모든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것 같아도 그 원인은 오래전부터 축적된 것이다. 급변 사태가 발생하기 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란 징조는 여러 번 나타난다. 코로나바이러스도 나름대로 인류에게 여러 번 경고를 보냈다. 가까운 과거만 돌이켜 보면, 2002년엔 ‘사스’가 와서 적지 않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 2014년엔 에볼라 바이러스가 왔었고, 그 다음해엔 ‘메르스’ 사태가 발생해서 온 나라가 한동안 공포에 떨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에는 이전의 감염병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었다. 하지만 변종인 코로나19는 달랐다.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이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바뀌는 징조가 나타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했듯이 이제 인류는 에이즈처럼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전제로 해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블랙 스완’으로서 코로나19는 인류에게 포스트코로나 뉴 노멀 시대를 열어주었다. 포스트코로나라는 새로운 시대와 뉴 노멀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삶의 조건이 되었다. 먼저 인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문명 패러다임의 생태학적 전환을 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는 인간에게는 재앙이지만 지구에게는 좋은 현상임이 속속 드러난다. 맑은 하늘에 웅장한 히말라야 설산의 모습이 다시 등장하고 오염으로 서식지를 떠났던 동물들이 돌아온다. 현재 인류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잡는 백신의 발명을 고대한다. 하지만 그런 백신을 개발한다 해도 인류는 바이러스와 전쟁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다. 인수공통감염병을 발생시켜서 바이러스를 진화시킨 장본인은 숙주인 인간들 자신이기 때문이다.

기』, 동녘사이언스, 2018.

6) 위의 책, 27쪽.

그런 의미에서 전염병의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 아니라 적대적 공존관계로 전개된다. 새로운 창이 나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새 방패를 서둘러 만들고, 그런 모순(矛盾)의 변증법으로 인류는 살아왔다. 그런 도전과 응전으로 인류 문명은 진보했고,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서 숙원인 100세 시대도 마침내 다가올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에 찾아온 코로나19는 인류에게 경종을 울린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인류는 깨달아야 한다. 46억년 지구역사에서 아무리 길게 잡아도 700만~500만 년 나이에 불과한 인류는 2억 2천8백만 년 전인 중생대 트라이아스기부터 6,500만 년 전 백악기까지 무려 1억 5천만년을 살았던 공룡처럼 한순간에 멸종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런 빅히스토리 문명사적 문제의식으로 ‘저출산’을 접근하면, 뉴 노멀과 연관된 새로운 관점과 해결책이 보일 수 있다.

뉴 노멀이란 과거의 기준과 표준으로 변하는 미래를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인류는 너무나 많은 전례 없는 일을 전례 없이 겪었다. 그러면서 이전의 길을 계속 따라 가는 관행에서 벗어나 길 없는 길을 만들어 가야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 방식을 바꾼 것처럼 살아가는 법도 바뀌어야 한다. 과거에는 새로운 길을 갈 때 도로지도를 갖고 백미러(back mirror)로 뒤를 보면서 앞으로 달렸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목적지를 입력한 후에 시시각각 변하는 도로상황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navigation)에 거의 전적으로 의지하며 운전을 한다. 이는 과거 지나왔던 길을 전범으로 삼는 것에서 미래의 변화 가능성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으로 운전법의 패러다임 전환을 한 것이다.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합계출산율 제고에만 매달리는 단계에서 벗어나 수사적 표현이 아닌 실제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 문제의식으로 2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첫째, 포스트코로나 시대 저출산을 하나의 뉴 노멀로 재인식해서 인구정책의 새로운 틀을 모색하자. 둘째, 뉴 노멀 시대에 맞게 과거 사례에 입각한 지도로부터 미래를 전망하는 내비게이션으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론적 대안을 찾아보자.

2. 한국사회 저출산의 계보학

합계출산율에서 한국은 이미 뉴 노멀 시대를 맞이했다. 전쟁이나 재난을 당하지도 않고 그것이 0점대로 떨어진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지만, 정부는 그런 비정상을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할 형편이다. 0점대로 추락한 ‘초저출산’은 한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 필요한 미래의 구성원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결국 국가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중대한 병이란 점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한국인은 거의 없다. 그런데 왜 정부가 온갖 정책을 짜내 펼쳐도 백약이 무효인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많은 분석은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톨스토이가 『안나 카레니나』에서 썼듯이,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⁷⁾ 마찬가지로 ‘초저출산’이란 국가적 불행이 발생한 이유

7)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연진희 옮김, 『안나 카레니나』, 민음사, 2019, 13쪽.

는 어느 하나가 아니라 여러 복잡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에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 시키지 않고 복잡한 방식으로 해명하려는 방법론이 계보학이다. 계보학은 과거가 어떻게 해서 현재에 이르렀는지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가 생겨난 과정을 역추적해서 출발점이 되는 여러 지점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출산의 원인분석은 어렵지만, 온갖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찾는 것은 비교적 쉽다. 일차적으로 국가와 개인이 문제를 보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국가는 저출산을 순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접근하지만, 실제로 출산을 담당해야 할 주체인 젊은 세대는 출산 자체가 삶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물론 국가는 출산과 함께 생겨나는 개인적 삶의 부담을 덜어주는 여러 정책을 시행했지만 뚜렷한 효과는 없었다. 위에서 톨스토이 말로 인용했듯이 우리시대 젊은 세대가 불행한 이유는 복합적이라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요컨대 저출산을 인구의 위기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국가가 ‘헬조선’, ‘N포 세대’라는 말로 대변되는 인간의 위기를 극복해 줄 수는 없다.

인류 역사상 젊은 세대가 힘들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는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힘든 시기에 도 기성세대는 애를 넣고 가족을 부양했다. 그런데 왜 요즘의 젊은 세대는 그것을 기피하는가? ‘저출산’ 시대를 낳은 지금 청년 세대와 ‘고출산’으로 태어난 그들 아버지 세대를 비교할 때, 전자가 후자보다 삶의 위기를 더 심각하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20세기 한국사회 변혁운동을 이끈 주체는 지금의 기성세대인 청년들이었다. 하지만 21세기 청년들은 그들 윗세대와 같은 사회적 위상에 처해 있지 않다. “청년이 문제 해결의 주체에서 문제 그 자체로, 사회를 이끌어갈 존재에서 사회가 해결할 고민거리로 전락”⁸⁾했다. 그런 청년 세대의 추락과 반비례해서 사회가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노년세대는 회춘을 추구한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청춘’이란 단어는 청년이 아닌 노년 세대가 전유하는 담론으로 바뀌었다.

과거로부터 배우는 시대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였다. 하지만 뉴 노멀 시대에는 “성공은 실패의 아버지”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합계출산율을 완화시키려는 정부의 인구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과거 정책이 성공했던 경험에 사로잡혀서 ‘뉴 노멀’로 나타난 저출산을 그 때의 정책 프레임에 입각해서 역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인구정책의 사전적 정의는 “인구변동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적 조치, 행정적 사업 및 구체적 시책을 말한다.”⁹⁾ 아이를 직접 낳는 생산자는 개인 특히 여성이다. 따라서 인구정책은 국가가 개인의 가장 은밀한 성 행위에 개입해서, 여성의 출산을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푸코의 용어를 빌어 말하면 생체권력(bio-power)의 전형이다. 푸코는 『성의 역사』에서 건강과 위생, 출생률, 수명 등에 개입하는 일련의 지식과 제도를 통해 전체로서의 인구를 통치 대상으로 포함하는 새로운 권력의 양상을 생체권력이라 명명했다.¹⁰⁾

인구란 근대 국가의 3요소인 영토, 주권, 국민이 하나의 앙상블로 결합한 실체로서, 한 영토

8) 이기훈, 『청년아 청년아 우리 청년아 - 근대, 청년을 호명하다』, 돌베개, 2014, 317쪽.

9) *Encyclopedia of Population*, edited by Paul Demeny and Geoffrey McNicoll, New York: McMillan Reference, 2003.

10) 미셸 푸코, 이규현 옮김, 『성의 역사 1: 지식의 의지』, 나남, 2004, 21쪽.

내에서 주권의 영향권 내에 있는 전체 국민의 수를 지칭한다. 인구라는 단어 자체가 한 영토 내에 사는 사람들을 숫자로 환원시켜서 국가의 자원으로 통치 대상으로 삼는다는 국가주의 발상으로 생겨난 개념이다. 인구정책에 내포된 국가주의를 유발 하리리는 다음과 같이 통찰했다. “국가가 생각하는 성공의 척도는 국민의 행복이 아니라 영토의 크기, 인구증가, GDP 증대였다. 독일, 프랑스, 일본 같은 산업화된 나라들은 대규모의 교육제도와 보건복지제도를 만들었지만, 이 제도들의 목표는 개인의 행복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력을 키우는 것이었다.”¹¹⁾ 학교를 세운 것도 국가에 충성할 유능하고 말 잘 듣는 시민들을 길러내기 위해서였다. 비스마르크가 역사상 최초로 국민연금과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 이유도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충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70세가 되면 나라가 당신을 보살펴줄 테니, 18세에는 나라를 위해 싸우고 40세에는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¹²⁾

1960-70년대 한국의 인구정책은 기본적으로 조국 근대화라는 국가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세워졌다. 그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은 산아제한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이바지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도 보장한다는 계몽운동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산은 국가에게는 절실할지 모르지만 개인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우리시대에는 그런 계몽 담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 결과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는 백 가지가 넘는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거의 모든 부분에서 목표로 설정한 지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합계출산율을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출산의 주체는 가임 여성이다. 그런데 한국사에서 언제부터 여성이 출산의 주체가 되었는가? 매우 최근의 일이다.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여성의 출산은 가문과 가족을 위한 무조건적인 의무였지 권리나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국가주의적으로 추진된 가족계획 운동이 여성을 출산의 주체로 의식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그렇기에 여성의 출산을 억제하는 가족계획운동이 한국사회 저출산의 계보학적 기원을 이룬다. “가족계획사업은 성과 사랑, 결혼에 관한 담론을 통해 여성을 특정한 방식으로 ‘주체화’ 하였다. 가족계획의 담론을 통해 부부관계는 가족 내에서 특권적인 위상을 부여받았고, 출산을 계획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관리하고 가계를 책임지는 여성의 주체성과 자율성이 강조되었다.”¹³⁾ 가족계획사업과 같은 국가의 생체권력에 의한 여성의 ‘종속화(subjection)’가 여성의 ‘주체화(subjectification)’를 가져오는 역설을 가져왔다. 그런 여성의 주체화는 여성을 가정의 주인인 주부(主婦)로 만들었다. 박정희 정부의 ‘조국 근대화’ 기획은 남성을 산업일꾼으로, 여성을 가정주부로 역할을 분담하는 가부장적 질서를 정립했다. 그런 분화를 통해 여성은 육아와 가정교육 그리고 가정경제의 주체가 되었다.

여성의 지위향상은 결혼과 출산을 저해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게 세계사의 보편적 현상이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의식화되고 사회 진출이 많아짐에 따라 남성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여성의 수가 늘어난다. 그러다 보니 여성이 일과 가정의 이중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모순에 대한 의식화가 일어났고, 청년 또한 일자리를 놓고 다른 남성 뿐 아니라 여성과도 경쟁

11) 유발 하라리, 김명주 옮김, 『호모 데우스 - 미래의 역사』, 김영사, 2017, 52쪽

12) 같은 책, 53쪽.

13) 조은주, 『가족과 통치 - 인구는 어떻게 정치의 문제가 되었나』, 창비, 2018, 263쪽.

을 벌여야만 하는 상황이 그들을 불행한 세대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과거의 결혼이 남성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성립했다면, 그럴 능력을 가진 남성의 숫자가 적어짐에 따라 결혼을 포기하기는 남성이 많아졌다. 여성 또한 남성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혼 및 임신을 포기하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 그런 복합적 현상을 반영해서 취업,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로부터 시작하여, 집과 경력 심지어 희망과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삶의 중요한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 자포자기하는 ‘N포 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의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보다 훨씬 풍족한 삶을 영위하고 역사상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으며 기성세대에게 배우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디지털 문화에 대해 가르쳐주는 유사 이래 가장 똑똑한 젊은 세대다. 삶의 객관적 조건은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 편리하고 좋아졌지만, 개인적 삶의 행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과 기회는 그렇지 않다는 주관적 상황의 괴리가 불평과 불만을 증대시켰다. 지금의 청년 세대 대다수는 한국사에서 처음으로 부모 세대의 경제성장을 능가할 가능성이 없는 시대를 살아야 하는 첫 세대라고 말한다.¹⁴⁾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적 상승을 할 수 있는 사다리가 없다는 현실이 무엇보다도 그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든다. 태생이 ‘금수저’나 ‘흙수저’냐로 개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새로운 신분사회가 도래했다는 절망감이 한국사회를 헝그리(hungry) 사회에서 앵그리(angry) 사회로 바꿨다.¹⁵⁾ 그런 식으로 계급모순과 세대모순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쌓인 불행의 집단 무의식이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표출된 게 ‘헬조선’ 증후군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라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 세상의 개벽이 일어났다. 코로나19가 ‘헬조선’ 증후군을 단번에 날려 보내는 기적을 일으켰다. 이번 사태로 우리가 모르는 한국의 진면목을 알았다. 그렇다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저출산은 해결될 것인가? 일반적으로 전쟁을 겪고 나면 출산율이 높아져서 베이비 붐 세대가 출현한다. 하지만 코로나19와의 전쟁 후에도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2003년 사스나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 더구나 코로나19는 결혼식도 연기하게 만들고 감염 위험과 경제상황 악화로 결혼·임신·출산·육아를 회피하는 현상은 더 두드러지고 이혼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출산율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단지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저출산’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코로나19는 지구에서 인간의 위치를 깨닫게 만들었다. 인간 없는 지구가 지구 환경은 물론 생태계의 다른 존재들에게도 다행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지구에서 인간의 존재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한국은 인구절벽을 걱정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구폭발이 재앙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고령화는 어쩔 수 없는 필연이지만, 저출산은 피할 수 있는 선택이라 보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역발상해서 생각해 보자. 고령화의 추세도 거의 세계 최고인 한국사회에서 저출산이 아닌 고출산 국가가 된다면, 그런 인구 쇼크가 훨씬 더 심각한 재앙이 되지 않겠는가? K 방역 성공 덕분에 한국은 하루아침에 기존의 선진국보다 더 뛰어난 국가로 떠올랐다. G2인 미국과 중국이 민낯을 드러내고 신냉전을 벌이는 상

14) 헬렌 레이저, 강은지 옮김, 『밀레니얼은 왜 가난한가』, 글담, 2020, 250쪽.

15) 전상인, 『헝그리 사회가 앵그리 사회로』, 기파랑, 2020.

황에서 세계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문명 모델을 기대하며, 한국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따라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그런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그런 문제의식으로 인구에 대한 문명사적 조망을 역사의 가장 큰 인식지평을 가진 빅히스토리(Big-history) 관점으로 해본다.

3. 인구에 대한 빅히스토리 문명사적 고찰

생명체는 자기 보존을 위해 외부와 물질을 교환하는 신진대사를 하고, 자기 유전 정보를 영속시킬 목적으로 번식을 한다. 개체는 죽음과 함께 세상에서 사라지지만 자손을 더 많이 그리고 더 멀리 퍼뜨려는 것이 생명체가 가진 본능이다. 그런 본능을 가진 이유를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로 설명했다. 유기체란 ‘이기적 유전자’를 담는 그릇이며 그것의 명령에 따라 작동하는 로봇이란 것이다.¹⁶⁾

그런 생명체 가운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신이 그런 운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유전자의 명령대호가 아니라 인간성이란 인위적 속성을 만들어서 자체적 삶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을 한다. 그러기 위한 인간 삶의 소프트웨어를 총칭하는 용어가 문화다. 인간이 다른 동물 처럼 선천적 본능이 아니라 문화라는 자기규정의 삶의 문법에 따라 산다는 것이 만물의 영장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인간은 몸의 하드웨어가 가진 결핍을 문화라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새보다 더 높이 하늘을 날고 물고기보다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문명을 건설했다.

인간이 자연에 순응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인간의 욕망과 생리에 맞게 변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은 과학, 특히 갈릴레이 이후 전개된 자연과학의 지식과 그것을 응용한 기술문명의 발달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은 과학을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으로서, “넓은 뜻으로는 학(學)을 이르고, 좁은 뜻으로는 자연 과학을 이른다.”¹⁷⁾고 정의한다. 그런 과학이 학문의 패러다임을 주도하기 시작한 것은 갈릴레오 갈릴레이(Galileo Galilei, 1564년~1642년)가 우주를 수학으로 써진 책이라고 인식하면 서부터다. 갈릴레이는 신은 더 이상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꾼이 아니라 수학적 원리로 만물을 있게 만든 전지전능한 기하학자라고 주장했다.

갈릴레이의 뒤를 이어 과학혁명을 완성한 과학자가 뉴턴이다. 1727년 그가 죽었을 때 당대의 영국 최고 시인 알렉산더 포프(Alexander Pope)는 업적을 기리는 묘비명을 썼다. “NATURE and Nature’s Laws lay hid in Night: God said, ‘Let Newton be!’ and all was light(자연과 자연 법칙은 밤의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다. 신이 ‘뉴턴이 있으라!’ 말하자, 모든 것에 빛이 밝혀졌다).” 이 묘비명은 종교계의 반대로 비록 새겨지진 못했지만, 인류 문명사에서 뉴턴이 차지하는 의미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기에 실제 묘비명보다 더 유명하다.

뉴턴이 신이 창조한 자연의 법칙을 세상에 밝혀냈다면, 인간이 만든 사회에서 개인이 행동하

16) 리처드 도킨스, 홍영남 옮김, 『이기적 유전자』, 을유문화사, 2006.

17)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98969&searchKeywordTo=3.

는 법칙을 탐구한 인문학자들이 데이비드 흄, 애덤 스미스, 애덤 퍼거슨으로 대표되는 18세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이다.¹⁸⁾ 그들의 고민은 개인들의 이기적 행동으로 재편성된 근대 상업사회에서 공공선(commonwealth)을 추구하는 시민적 덕성을 의무로 삼는 정치공동체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느냐 이었다. 그들은 경험적 관찰을 통해 인간 본성은 자기를 보존하려는 자애심(self-love)과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자비심(benevolence)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런 양면성을 기초로 해서 근대 경제의 작동방식과 근대 사회의 존립 토대를 제시하여 경제학의 아버지가 된 도덕철학자가 애덤 스미스다. 그는 이기적 개인이 타인이 원하는 것을 주는 이유는 타인도 답례로 나에게 원하는 것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때문이라 했다. 이렇게 해서 주고받는 것으로 성립하는 것이 교환이다. 교환은 각자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서로 바꾸는 상업의 근간이 되는 행위다. 교환이 성립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차이와 불균형이다. 그것을 조정하는 교환의 장소가 시장이다. 스미스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절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예정 조화(豫定調和)가 실현될 수 있다고 믿었다.

예정 조화는 수요와 공급 사이의 불균형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조절되는 것으로 실현된다. 스미스는 사회적 분업의 정도는 시장의 크기에 달려 있고, 시장의 크기는 인구에 달려 있다고 했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인구 감소로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이다. 높은 임금이 기계화로의 전환을 촉진시켰다. 그런데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성장의 마의 장벽이 무너진 이후 이전 시대에는 불가능했던 인구의 증가가 일어났다. 산업혁명이 시작하는 1751-1800년과 1800-1850년 동안 영국의 인구증가율은 각각 50%와 92%로 서유럽에서 가장 높았다.¹⁹⁾ 1700년 650만이었던 영국 인구가 1851년에는 2,100만으로 크게 증가했다.

근대 산업사회에서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국력의 성장이 아니라 국가의 부와 사회의 안녕을 위협하는 큰 문제로 대두했다. 그 문제를 통찰하는 『인구론(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1789년)을 써서 인구학(demography)의 창시자가 된 경제학자가 토머스 맬서스(Thomas R. Malthus)다. 생물학적 존재로서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본능은 생존과 생식이다.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음식물 섭취다. 이와 더불어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있는 것이 남녀 간의 정욕이며, 이를 통해 생식이 이뤄진다. 물질적인 음식물은 한정돼 있는 반면, 비물질적인 인간의 성욕은 한정 없이 분출되는 성향이 있다. 그런데도 후자 때문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전자가 브레이크의 기능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 음식물과 인구의 상관관계를 역사의 보편법칙으로 정식화 한 명제가 맬서스가 『인구론』 초판에 썼던 “인구는 (억제되지 않을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유명한 문장이다.

인구론에 입각해서 맬서스는 산업혁명 후 두드러졌던 실업과 빈곤 등의 사회악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성적 본능과 인구 자체의 내재적 동인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구빈법과 같은 국가의 개입이 아니라 성욕의 ‘도덕적 억제’가 올바른 해결책

18) 이영석, 『지식인과 사회: 스코틀랜드 계몽운동의 역사』, 아카넷, 2014.

19) 송병건, 「산업혁명 시기 영국 기술선도의 요인」, 『경제사학』 62(2016), 488쪽.

이라 주장했다.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복지정책은 오히려 인구의 증가만을 더욱더 초래해서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기 때문에, 결혼을 늦추거나 출산을 자제하는 ‘예방적 억제’를 할 수 있는 국가의 통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멜서스의 인구론에 대해 가장 큰 반론을 제기한 사상가가 마르크스다. 그는 인구에 대한 초역사적 법칙 같은 것은 없으며, 모든 시대는 자기 시대의 인구법칙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빈곤은 멜서스주의에 입각해서 발생하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아일랜드에서는 대기근으로 인구가 1/3이나 줄었지만 실업자는 감소하지 않고 반대로 증가했다는 것을 반증의 사례로 제시했다. 기계화된 공장이 잉여인력을 초래해서 실업자를 증가시켰다. 멜서스는 노동자가 빈곤한 이유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는 개인적 책임 탓으로 돌렸다. 이에 반해 마르크스는 자본과 생산수단을 독점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이 그들이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폐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정책의 측면에서 둘 사이의 차이를 정리하면, 멜서스의 인구론은 인구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적정한 수’라는 개념 정립에 결정적 기여를 했고, 인구 문제의 해결 주체로 국가의 ‘통치성’을 강조했다. 이에 반대했던 마르크스는 국가가 아닌 사회의 차원에서 빈곤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권력의 대상이 되는 인구 대신에 사회적 범주인 계급 개념에 입각해서 문제를 접근했다. 계급은 한 지역에 사는 인간을 숫자화 된 집합체가 아니라, 부의 등급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분석 개념이다.

마르크스의 계급론에 따르면, 부르주아에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국가는 소멸하고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이 역사의 법칙이다. 하지만 역사에서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는 계속적인 수정을 통해 발전을 했던 반면,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몰락했다. 자본주의 체제가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복지정책을 펴는 사회국가로 변모했던 것 덕분이다. 사회복지국가는 사회의 계급갈등을 국가의 국민으로 포섭해서 해소할 수 있는 ‘통치성’을 발휘했고, 그럼으로써 국민은 국가의 통치대상이 되는 인구로 산정된다.

애덤 스미스의 시장법칙이 멜서스의 인구법칙으로 발전하고, 그 흐름에 반대해서 마르크스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라는 명제로 인구법칙 대신에 계급법칙을 주장했다. 멜서스의 『인구론』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은 한편, 마르크스의 『자본론』 집필에 영감을 준 자연법칙을 발견을 과학자가 찰스 다윈이다. 다윈은 멜서스의 인구법칙에서 생존경쟁과 자연선택으로 이뤄지는 진화에 관한 생각의 단초를 얻었다.

자연에서 우리는 멜서스의 이론을 모든 동식물에게 훨씬 강력하게 적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에서는 인위적으로 식량을 증가시키는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분별력 있게 결혼을 자제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종이 그 수에서 현재 어느 정도 빠르게 증가할지라도 세상이 그들 모두를 수용하지 못하니 이러한 증가가 항상 일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한 쌍의 생물에서 유래한 자손들이 지구를 모두 뒤덮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아주 느리게 번식하는 인간조차도 25년 만에 그 수가 두 배로 늘러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율이라면 불과 몇 천 년 만에 지구

는 인간들로 발 디딜 틈도 없어질 것이다.²⁰⁾

모든 개체는 환경에 적합할 때 생존할 수 있다. 다윈은 개체가 아닌 종(種)의 차원으로 그런 적자생존의 원리를 적용하여 인류를 포함한 모든 유기체의 ‘종의 기원’을 해명하는 진화론을 제시했다. 스미스, 맬서스, 마르크스가 인간을 정치공동체 내지 사회 속의 존재, 곧 “폴리스적 동물”로 설명했다면, 다윈은 자연 생태계에서 진화하여 생겨난 하나의 종으로 파악했다.

인간이 “폴리스적 동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문화라는 의미체계를 만들어낸 덕분이다. 인간의 문화적 행위는 기본적으로 반자연적이고, 그 덕분에 인류는 만물의 영장으로 등극할 수 있었다. 다윈의 진화론은 이런 인간중심주의를 깨는 망치였다. 인류도 다른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자연선택을 통한 적자생존으로 살아남았고 진화했다. 진화의 핵심은 번식이다. 번식을 통해 유전자가 전달되고 변이가 일어날 수 있기에, 번식을 억제하는 것은 반자연적인 행위다. 인간은 맬서스가 『인구론』에서 결혼을 늦추거나 출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제안한 것처럼, 자연에 반하는 문화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유기체다. 인간은 문화적 진화를 통해 자연적 진화를 통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내는 노력을 계속 기울임으로써 문명을 발달시켜왔다. 맬서스가 발견한 역사에서 작동하는 인구법칙을 다윈이 자연에서 동일하게 읽어낸 것이 진화의 원리인 자연선택이다. 국가가 기획하고 추진하는 인구정책은 자연적으로 작동하는 인구법칙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문화적 행위이고, 한국이 1970년대 시행했던 가족계획운동과 산아제한정책은 그 전형적인 사례다. 21세기 한국이 직면한 인구절벽은 그런 방식으로 국가가 인구법칙에 개입하여 인구생태계의 혼란을 초래한 업보일 수 있다는 것이 저출산에 대한 계보학적 성찰이다.

코로나19의 출현은 반자연적인 문명에 대한 일종의 경고다. 그렇다면 인구정책도 자연으로 되돌아가야 하는가? 문화적 행위가 낳은 독성 때문에 문화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이까지 버리는 우매한 짓이다. 다시 근본으로 되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자연 생태계 이든 국가 공동체이든 안녕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전체 개체의 숫자다. 인간 사회의 경우는 그 숫자를 인구라고 부른다. 전 지구적으로 볼 때, 인간의 개체 수는 점점 늘어나서 인구 폭발의 경고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다. 지구가 46억년 동안 축적한 화석에너지의 사용으로 지구온난화가 초래됐고, 기후학자들은 이미 돌이킬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 지구의 6번째 대멸종이 임박해있다고 경고한다.

코로나19는 그런 징조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구가 아니라 인간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류는 큰 고통을 받았지만 지구생태계는 복원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인류는 자체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는 지구의 ‘기생충’으로 살아가는 유기체라 말할 수 있다. 지구에서 인류가 생존하는 방식은 인간을 숙주로 해서 자신의 정보를 퍼뜨리는 코로나19의 존재방식과 과연 얼마나 다른가? 코로나19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전파율은 높지만 치사율은 낮다는 것이다. 그것은 진화의 소산이다. 코로나19가 인간과 적대적 공존관계를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숙주인 인간이 죽을 정도의 병은 아니면서 감염은 잘 되는 속성을 갖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창에

20) 찰스 다윈, 김관선 옮김, 『종의 기원』, 한길사, 2014, 101쪽.

대한 방패를 인류는 곧 만들 것이다. 이 모순(矛盾)의 변증법이 얼마나 오랫동안 작동할 것인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한 때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과 같은 포식자처럼 현생 인류도 한순간에 멸종하는 종이 될 수 있다는 ‘문명의 붕괴(Collapse)’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²¹⁾ 이제 인류는 지구환경을 더 이상 파괴하지 않으며 종의 다양성을 해치지 않는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신문명 패러다임에 대한 사유를 할 때,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인구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구 방정식을 푸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공간적 차이다. 현생 인류가 가진 특이성 가운데 하나가 지구상의 유기체 가운데 유일하게 전 지구 생태계를 지배한 가장 강력한 ‘침입종(Invaders)’이란 점이다.²²⁾ 아프리카의 한구석에서 출현해서 전 지구를 정복한 현생인류는 일단 한번 발을 들이고 나면 그 지역의 동물상(특정 지역에 사는 모든 동물)을 붕괴시키고 생태계 격변을 일으키는 가장 침입성이 강한 종이다. 현생인류가 출현하기 이전에는 이처럼 지구의 전 지역을 점령해 나가는 삶의 패턴을 가진 종은 46억년 지구 역사에서 전례가 없었다.²³⁾ 그런데 문제는 전 지구로 퍼져나간 인류들 사이에 문명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그런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생태환경의 차이로부터 설명했다. 같은 위도 상에 가장 넓게 위치한 유라시아 대륙에서 오랫동안 생물학적·문화적 진화가 일어났던 것 덕분에 신대륙을 정복하는 세계화가 초래됐다는 것이다.²⁴⁾ 세계화는 대륙 사이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하지만 ‘아웃 오브 아프리카(Out of Africa)’ 이후 다시 이민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지구가 평평하게 조정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그런 세계화의 흐름을 역전시키고 국민국가를 다문화사회로 재편될 수 있는 인구이동을 정지시켰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그런 세계화가 재개될 것인가, 아니면 탈세계화라는 뉴 노멀이 자리를 잡을 것인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코로나19 이전의 세계로는 되돌아 갈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의 문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의 인구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이다. 세계는 인구가 폭발하지만, 한국은 초저출산으로 인해 장차 국가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는 인구절벽의 모순적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피터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가 “인구 통계의 변화야말로 미래와 관련된 것 가운데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²⁵⁾이라 말했던 것처럼, 인구는 ‘정해진 미래’다. 하지만 미래의 인구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래의 적정인구수가 얼마인가의 산정이다.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포스트코로나 뉴 노멀 시대 한반도 내지 한국의 적정인구수가 과연 얼마인가의 예측이다. 그것은 결국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기준과 표준이 수시로 바뀌는 뉴 노멀의 조건 속에서 그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것은 변화한다. 하늘을 나는 새를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새가 보이는 곳이 아니라 날아

21) 재레드 다이아몬드, 강주현 옮김, 『문명의 붕괴(Collapse) - 과거의 위대했던 문명은 왜 몰락했는가』, 김영사, 2005.

22) 팻 시프먼, 조은영 옮김, 『침입종 인간 -인류의 변성과 미래에 대한 근원적 탐구』, 푸른숲, 2017.

23) 위의 책, 30쪽.

24) 재레드 다이아몬드, 김진준 옮김, 『총, 균, 쇠: 무기, 병균, 금속은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가』, 문학사상, 2005.

25) 피터 드러커, 이재규 옮김, 『변화 리더의 조건』, 청림출판, 2014, 66쪽.

가는 방향을 향해서 쏘아야 한다. 도대체 인류 역사가 어디로 가는가? 지금 인류는 이전의 신석기 농업혁명에 비견되는 역사상 가장 빠르고 커다란 문명사적 전환을 하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뉴 노멀 시대 인구의 미래는 비록 어느 정도 정해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인간의 미래는 완전히 열려 있다. 완전히 열려 있는 인간의 미래를 위한 인구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일단은 미래를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 코로나19는 인류에게 많은 고통과 피해를 주었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 줌으로써 문명 진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위기란 곧 위험한 기회라는 문제의식으로 그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본다.

4. 인구정책을 위한 온톨로지(ontology) 구축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 가는 나라다. 지금의 고령화 속도면 2025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에 반해 2019년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추락해서 작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됐다. 인구망국론은 이미 오래전에 나왔다. 2006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은 저출산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질 첫 번째 국가로 대한민국을 거론했다. 국내에서는 『2065 한반도가 사라진다』²⁶⁾가 나왔고, 유엔 밀레니엄 프로젝트 일환인 ‘2020 한국미래보고서’도 한국이 인구감소로 인해 2065년엔 중국 경제에 흡수통합 될 거란 전망도 내놓았다.²⁷⁾

저출산에 대한 공포의 시나리오는 일반적으로 현재의 문명 패러다임을 준거로 미래의 인구 감소가 초래할 위험성을 경고하는 플롯으로 짜인다. 45년 후인 2065년에도 지금과 같은 문명 방식으로 산다는 전제로 그런 예측을 한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 중세사가 르 고프(Jacques Le Goff)는 문명이란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의해 정의된다.”²⁸⁾고 했다. 한 시대에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문명 패러다임에 따라 적정 인구가 계산되고, 국가의 존립과 유지 및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인 인구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적정 인구를 산정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생산가능인구(15~65세)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10년 동안 매년 32만 명씩 생산가능인구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는 정해진 미래를 말한다. 하지만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문명 패러다임은 바뀐다. 정보량이 무어의 법칙(Moore’s Law)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디지털 시대 중요한 특징이 지식이 많아질수록 세계는 더 빨리 변하고, 새로운 지식이 증가할수록 세상에 대해 더 모르는 역설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미래 예측이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산다. 그런 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생존전략으로 나온 말이 뉴 노멀이다.

뉴 노멀은 앞서 지도 및 백미러와 내비게이션의 비유로 대조했듯이, 시간의 중심을 과거에서 미래로 이동하여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문명 문법을 지칭한다.

26) 박익환, 『2065 한반도가 사라진다』, 바른북스, 2017.

27) 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 『UN 미래 보고서』, 교보문고, 2006, 27쪽.

28) 자크 르 고프·장-모리스드 몽트르미, 최애리 옮김, 『중세를 찾아서』, 해나무, 2005, 183쪽.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종(種) 전체의 과거 경험과 지식을 데이터로 전환하여 미래의 이정표로 삼을 수 있는 문화라는 삶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문명을 가졌다는 점이다. 그런 문명을 가진 존재이기에 장차 저출산이 초래할 수 있는 미래의 재앙에 대비하는 인구정책을 세우려는 일을 한다.

과거의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패턴이다. 인구통계는 그런 데이터의 전형이다. 통계는 말한다. 초저출산을 통한 인구감소는 노동과 소비의 주체를 감소시켜서 국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현재 인구 1명의 노동생산성이 5년 후에도 같을 것인가? 디지털 문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다. 지식과 정보가 미래의 부다. 그런데 100년 전 조상이 가졌던 정보량과 지금 우리가 가진 정보량이 같은가? 과거 인류가 축적한 아날로그 데이터의 총량은 불과 최근 몇 년간에 생겨난 디지털 데이터에 비하면 새 밭의 피보다 작다. 빅데이터의 패턴이 보여주는 것은 과거-현재-미래의 인과성이 아닌 상관성이다. 인과성은 결정적이지만, 상관성은 관계적이다.²⁹⁾ 빅데이터를 통해 상관성을 읽어내면 인간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사고실험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뉴 노멀 시대 인간이 지도와 백미러가 아니라 내비게이션에 의거해서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신문명 패러다임이다.

코로나19를 통해 급부상한 공간이 디지털 공간이다. 비대면 원격으로 살아야 하는 환경에서도 문명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현실 공간(real space)이외에 디지털 공간(digital space)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 제일이다. 그 덕분에 한국경제는 덜 타격을 받았으며 K방역이라는 세계의 모범이 되는 방역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인류는 3 공간에 살 것이다. 현실 공간, 디지털 공간, 그리고 둘의 혼합 공간(mixed space)이다. 그렇다면 아날로그 시대 오직 현실 공간에서만 활동하던 인구 1명과 3 공간에서 멀티태스킹(multitasking) 하는 인구 1명을 동일한 한 사람으로 산정해서 저출산 때문에 국가가 망한다고 예측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현실 공간에서의 세계화는 급제동이 걸렸지만, 디지털 공간에서의 활동은 더욱 강화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리적 공간에서의 원자적 개인화를 강제했고, 그로부터 단절된 관계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연결과 소통으로 상쇄하는 것으로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단락되면, 그런 경향성은 완화되겠지만 후퇴하진 않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화는 역풍을 맞고 정지해 있지만, 로컬 차원에서의 스마트시티는 순풍을 타고 전진한다. 스마트기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신경망으로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스마트시티로의 전환 필요성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더욱 절실했다. 사물인터넷(IoT)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도시 전체에 센서가 설치된다면, 인구는 데이터 생산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연결을 통한 돌연변이가 문명의 '창발적 진화(emergent evolution)'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시티가 현실과 가상이 결합하는 증강 현실을 사는 미래 문명에서 적정인구를 산정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표본으로 실험실이 될 수 있다.

population의 번역을 1950년대 중국에서 '인구(人口)'가 아닌 '인수(人手)'로 하자는 주장

29) 빅토르 마이어 원버거 · 케네스 쿠키어, 이지연 옮김, 『빅 데이터가 만드는 세상: 데이터는 알고 있다』, 21세기북스, 2013, 102쪽.

이 나온 적 있었다. 그것을 말했던 사람은 마오쩌둥이다. 그는 인구를 소비층이 아닌 노동력으로 보자는 취지로 그런 주장을 했다. 중국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디지털전체주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K방역이라 일컬어지는 민주시민공화정 거버넌스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선진국으로 단번에 부상했다. 그런 전기를 맞이하여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신문명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인구 개념 자체를 바꾸는 뉴 노멀을 만들 첫 번째 요인이 인공지능이다. 인구란 국력의 핵심이기에 국가의 인적자원으로 관리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로봇세가 도입되고 반려동물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세상에서 인구센서스의 뉴노멀이 생겨날 수 있다. 2030년에는 GDP의 20-30%가 인공지능에 의해 생산될 거라 추정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가치와 역할은 무엇인가? 국가는 부자지만, 개인은 빈곤한 시대가 도래 한다. 코로나19 덕분에 기본소득의 시험대가 될 수 있는 국민재난소득이 분배되고, 전 국민고용보험의 도입도 현안으로 논의된다.

인간의 거의 모든 활동이 점점 더 컴퓨터를 매개로 해서 이뤄진다. 현재 거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컴퓨터가 스마트 폰이다. 세계는 점점 IT기술을 사용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바뀌고, 그래서 정보 철학자 루치아노 플로리디(Luciano Floridi)는 “세계는 지금 거대한 컴퓨터처럼 변화하고 있다.”³⁰⁾고 말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현실 공간과 디지털 공간을 혼합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디지로그(digilog) 문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본격 전개될 것이다. 학교 수업도 원격과 교실 수업을 병행하고, 의료체제도 원격과 대면의 역할 분담을 하는 것으로 개편돼야 한다. 현실과 디지털 공간의 혼합은 인간 삶의 영역을 넓혀서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이란 새로운 생활세계를 열어주는 효과를 낼 것이다. 적정인구 계산도 그런 공간적 확장에 맞춰 디지로그 문명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구정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 요컨대 인간이 현실 공간, 디지털 공간, 그리고 그 둘을 혼합한 증강 공간이란 3공간에서 살아가는 문명 패러다임에 맞춘 인구정책의 새로운 틀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번 기회에 한국의 미래 사회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인구 온톨로지(ontology)를 구축하는 제안을 한다. 인구와 연관된 여러 통계자료를 모아 디지털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시뮬레이션 해보는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해보자. 현재 학문의 거의 전 분야에서 ‘컴퓨터적 전환(computational turn)’이 일어난다. 인구학에도 인구 변동, 출산율 전개, 이주, 연금 제도, 건강관리 및 수명 등 인구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컴퓨팅 모델로 처리해서 연구하는 ‘컴퓨터 인구학(Computational Demography)’이 있다.³¹⁾

뉴 노멀 시대에는 기존의 길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을 때 미래를 대비하고 만들 수 있다. 세상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데이터를 통해서다. 인간은

30) 스티브 발머, 돈 탭스콧 외, 『무엇이 우리를 진화하게 하는가』, 서울디지털포럼 사무국 편, 방영호 외 옮김 (알키, 2013), 48-4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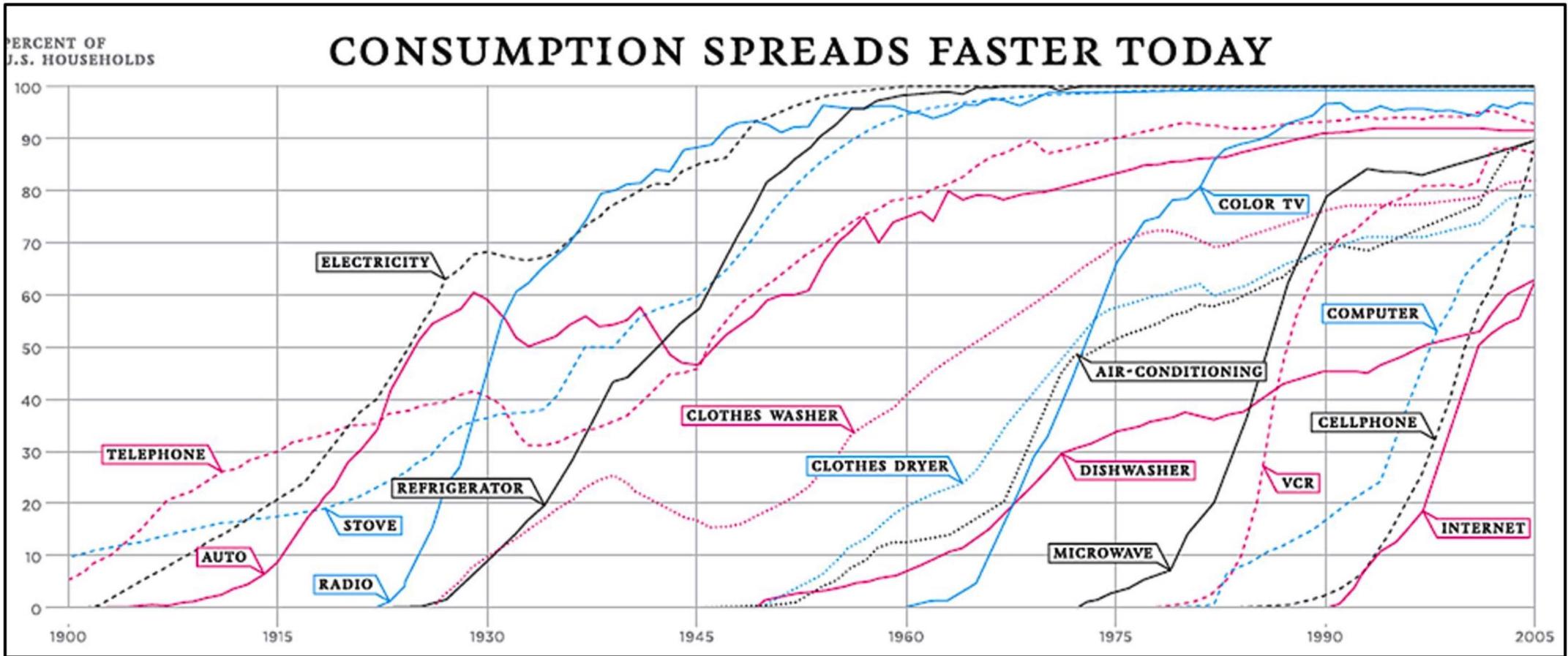
31)

<https://www.informatik.uni-rostock.de/en/study-teaching/bachelor-study-courses/computer-science-bsc/profile-during-the-studies/computational-demography/>.

컴퓨터의 발명을 통해 축적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엄청난 크기로 확대했고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그 덕분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실험이 가능해졌다. 빅데이터를 통해 인간이 읽을 수 있는 것은 과거의 패턴이다. 그런데 컴퓨팅 모델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하면, 과거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는 행위자로서 인간의 역할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런 ‘컴퓨터적 사고 (computational thinking)’를 통해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펼치는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짜보자. 그러면 한국의 인구는 비록 정해진 미래 일지언정, 한국인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4차산업혁명과 인간의 미래

이원재 KAIST
저출산 인문사회포럼 2020 6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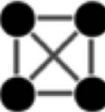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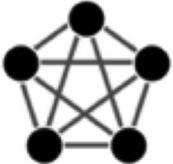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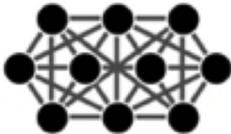
when *MEDIA* matters?

Zuhandensein vs. *Vorhandensein*

readiness-to-h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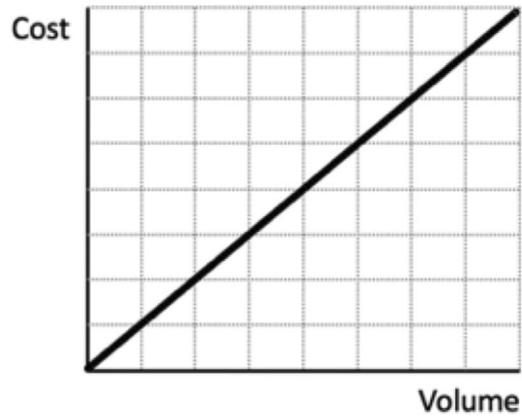
presence-to-hand



<u>#Items</u>		<u>#links</u>
1		0
2		1
3		3
4		6
5		10
	⋮	
10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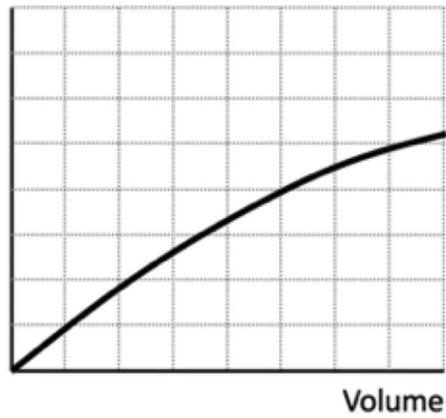
Pre-Industrial Age

“Individual productiv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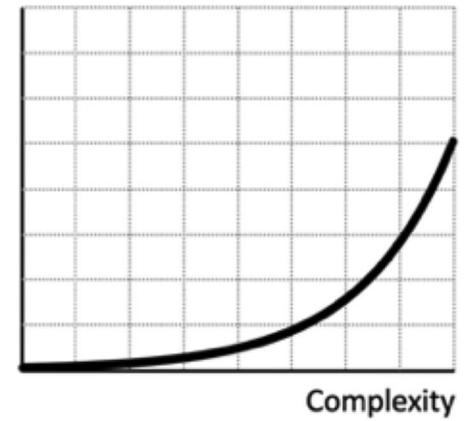
Industrial Age

“Economies of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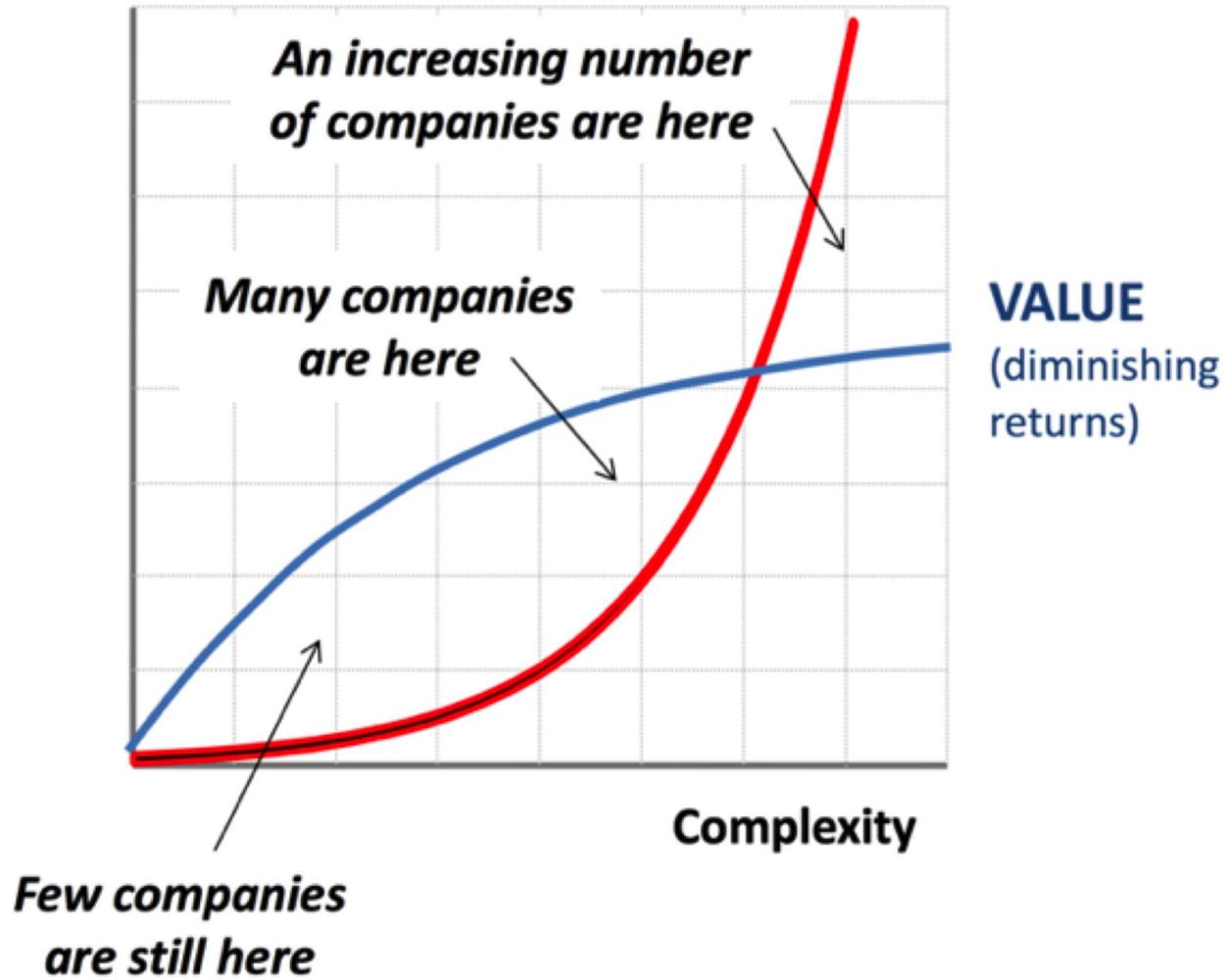


Post-Industrial Age

“Complexity Costs”



COST & RISK
(exponential growth)



New ViconNet 8 VMS now available

SEARCH FEATURE
Quickly find the device you are looking for

ACTIVE DIRECTORY
Seamless integration of user and passwords across entire network

RECORDING MANAGEMENT
Simple way to configure recording

MASKING FEATURE
Flexible privacy masking pre- and post-recording

VIDEO DISPLAY AREA
Controls to select number of display panes

THUMBNAIL SEARCH
Quick visual search to identify video changes

UPDATED ARCHIVE WIZARD
Easily create authenticated archives for quick playback

ViconNet 8 video management software (VMS) provides a more efficient system for managing video and has strengthened the level of integration with all open standard devices. ViconNet 8 VMS is now fully integrated with the HDEExpress NVRs, Express DVRs and the Vicon Access Control (VAX)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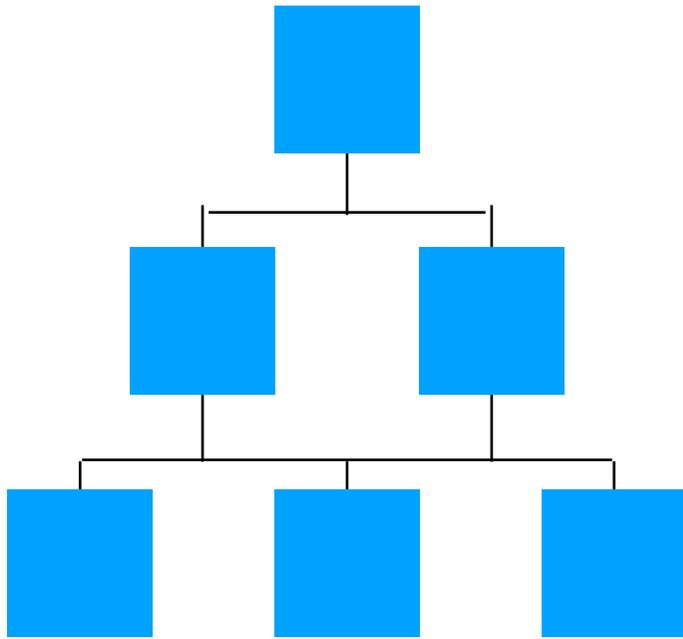
Instrumental Rationality

Recursive Fun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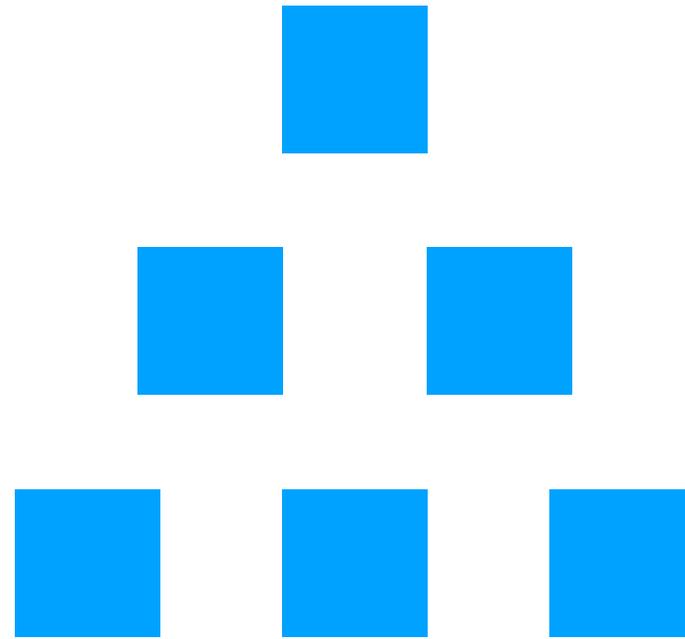
To Rethink

Ideas
Continuous Probability
Contingency

Materialism
Categorical Substance
Prog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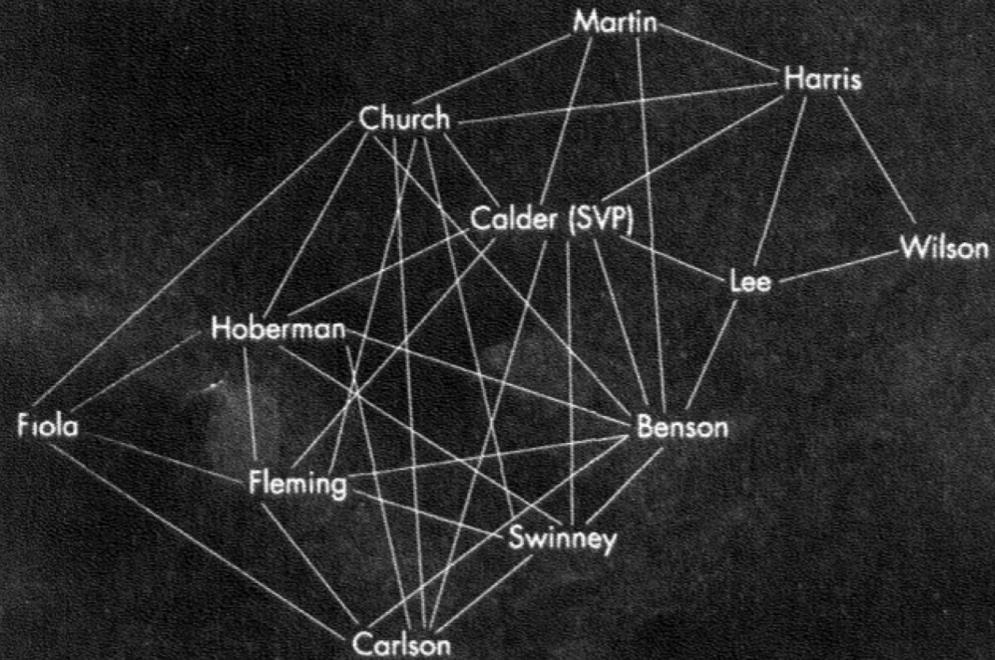


We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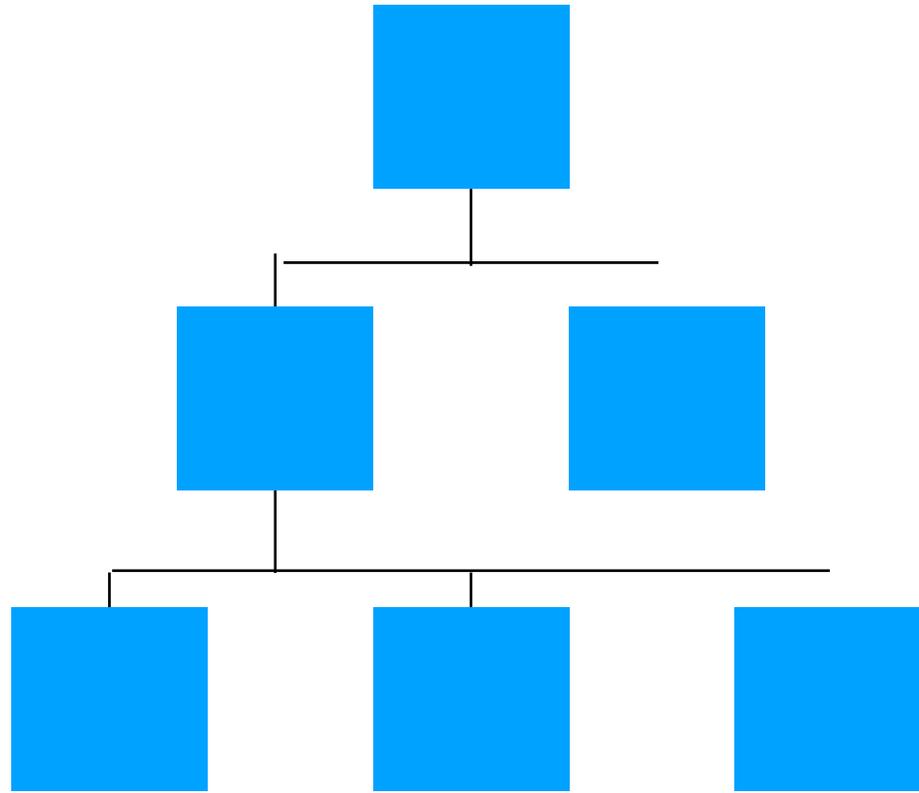


Weber / Lukacs

How the CEO Views the Trust Net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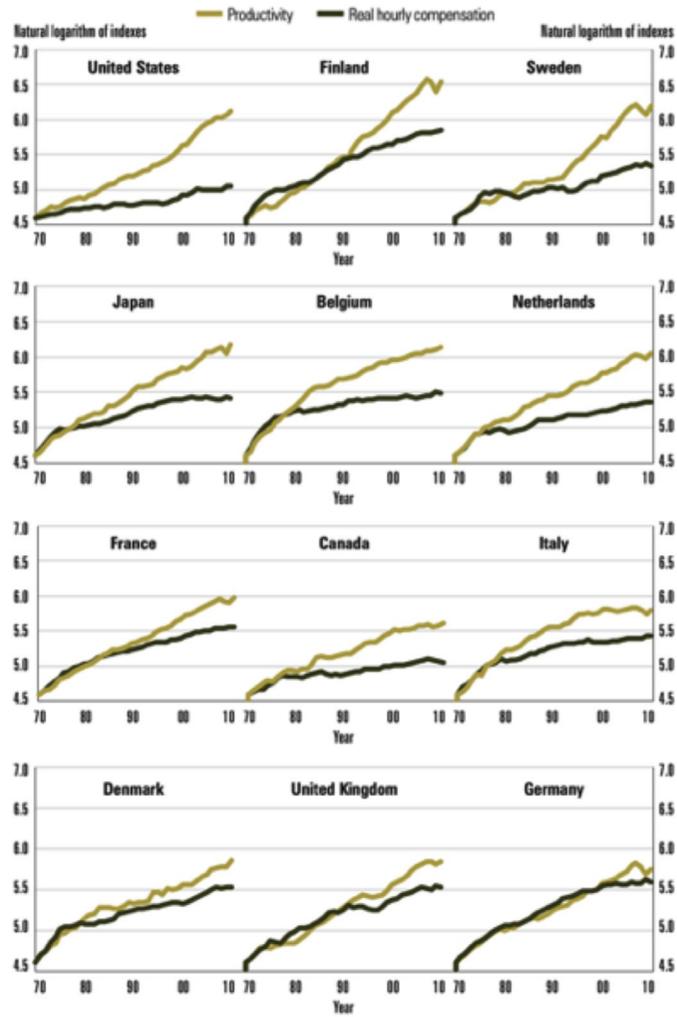


Krackhardt - The Organization Behind the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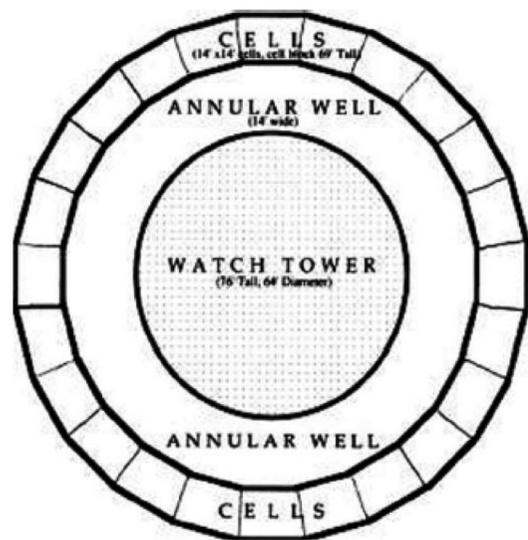
Coase / Williamson

Gap between productivity and real hourly compensation in manufacturing, selected countries, 197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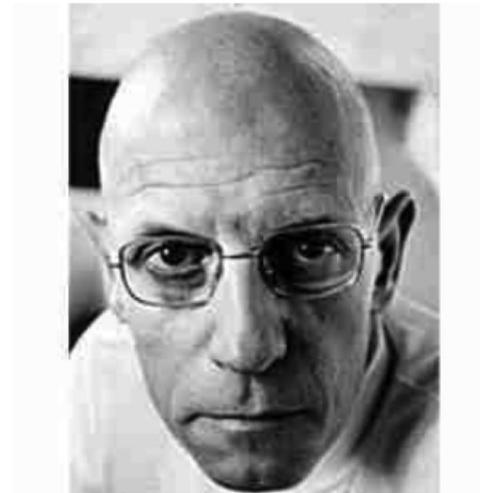


SOURCES: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인간이란 무엇인가



Panopticon schematic, 1791



Michel Foucault, 1975 © Camera Press



20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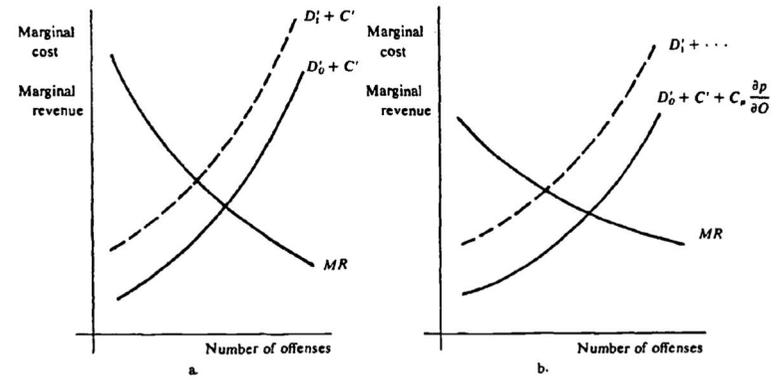


FIGURE 2



10.10.17 | PLATFORM WARS

How To Stop Worrying And Love The Great AI War Of 2018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e biggest opportunity in business since mobile, for tech giants and upstarts alike. It's also the most confusing. We're here to help.



[Illustration: Daniel Zender]



ESSAY

One Giant Step for a Chess-Playing Machine

The stunning success of AlphaZero, a deep-learning algorithm, heralds a new age of insight — one that, for humans, may not last long.



casting the Google DeepMind Challenge Match between Google's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 AlphaGo, a phaZero, and South Korean professional Go player, Lee Sedol, in an electronics store in Seoul in 2016. The con
In Young-joon/Associated Press

By Steven Strogatz

Dec. 26,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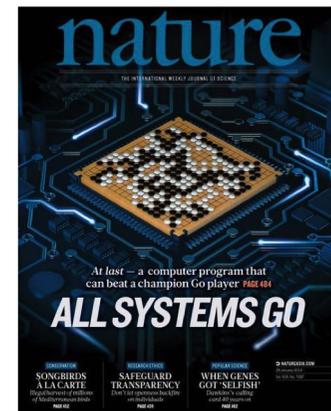
AI vs. AGI

[general]

nativism

tabula rasa

Convolutional layers
Monte Carlo Tree Search
Fan Hui



VOL. LIX. No. 236.]

[October, 1950

MIND
A QUARTERLY REVIEW
OF
PSYCHOLOGY AND PHILOSOP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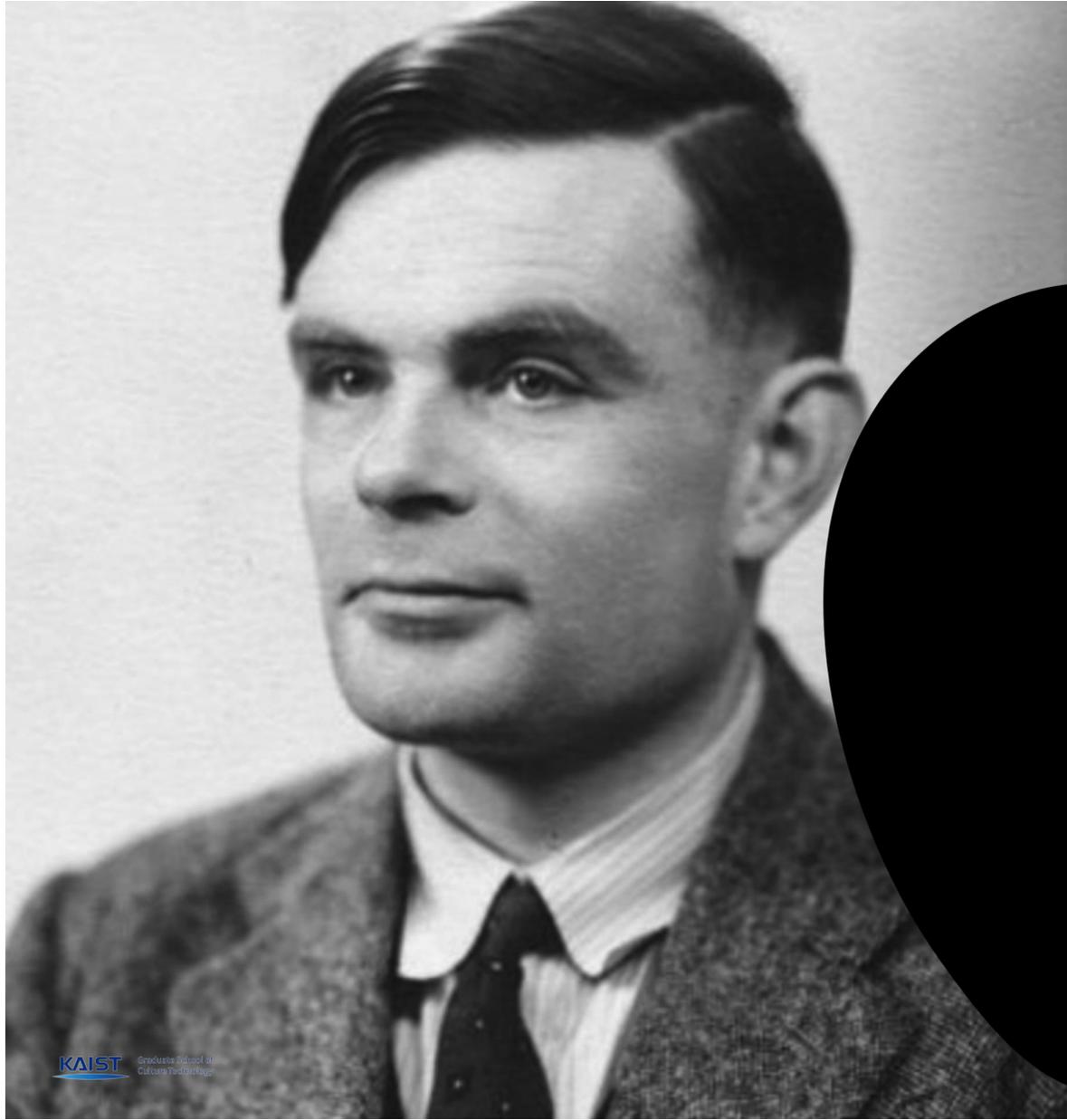


I.—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

BY A. M. TURING

**It might be urged that when playing the
'imitation game', the best strategy for the
machine may possibly be something other
than imitation of the behaviour of a man**

Turing 1950 p. 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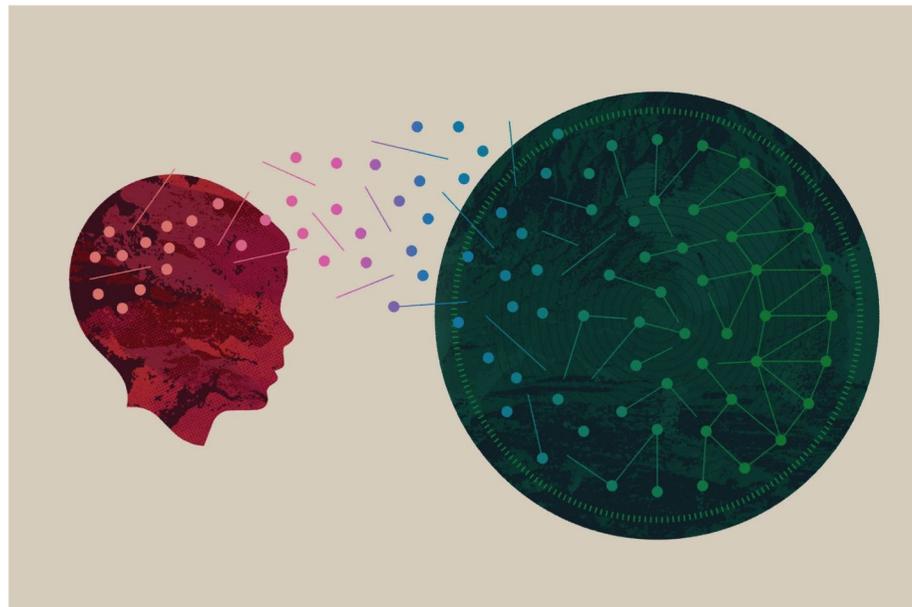
Opinion

OPIN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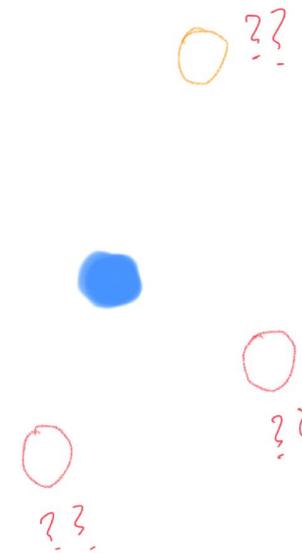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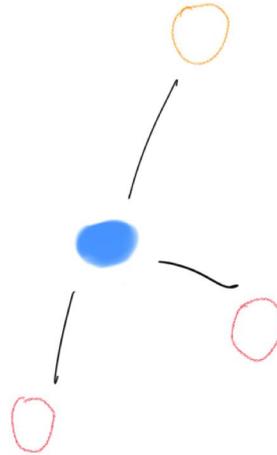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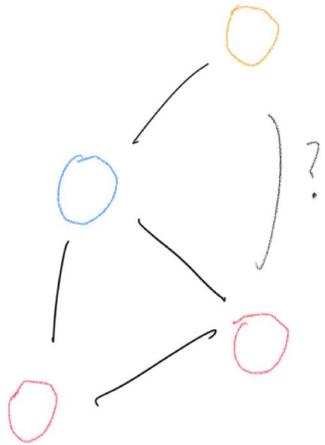
Co-Parenting With Alexa

By Rachel Botsman

Oct. 7, 2017



Mark Weaver



privacy